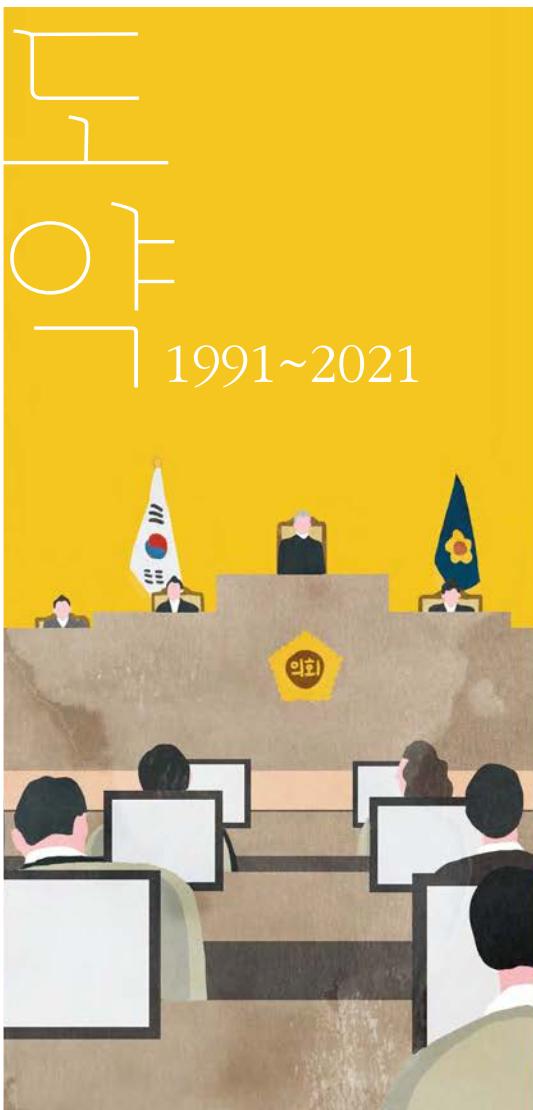


지방의회
30년을 그리다

세종의회 30년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지방의회 30주년 특집호 / 통권 제30호



SEJONG CITY COUNCIL



풀뿌리 민주주의가 빚어낸 지난 30년의 여정 주민주권자치 실현에 기여해온 지방의회 위상 재조명



2021년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에 기여해온 지방의회의 역사와 위상과 함께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의 미래 발전방향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의정소식지(‘세종의회소식’)를 ‘지방의회 30주년 특집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의회소식>은 세종시민들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최로 열리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소중하게 전달됩니다. 지방의회 30주년 특집호가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기대에 힘입어 전국 지방의회와 공히 ‘보다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각오와 의지, 많은 이들의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지면을 빌려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이야기할 때 ‘부활’이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지방의회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염원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제 모습을 찾으려고 했던 각고의 노력과 의지가 암울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지방의회의 생명력 즉, 주민 주권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부활’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다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이처럼 지방의회의 역사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 과정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광복 직후인 1948년, 건국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각 의회를 둔다’는 지방의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의회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1952년 4월 시와 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사상 최초로 이뤄졌습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의 새 시대 위한 ‘소통과 협력’ 필요

1952년 최초의 민선 지방의회 구성 이후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더해지면서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제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군사독재의 폭정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지방자치제의 암흑기와 쇠퇴기’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또 한 번 역사의 물길을 바꿔놓았습니다.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에 따라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1991년 주민 직접선거 방식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이 선출되는 역사적인 순간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한 방편으로 여겨졌던 ‘지방의회’는 이제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민주권자치를 위한 독립기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상하구도에서 협력적 상생 관계를 형성하려는 변화와 시도 역시 계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권력 분립의 정의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지방의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 역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뤄낸 값진 결실일 것입니다.

열망의 30년과 도약의 30년을 지나 희망의 30년 맞이할 때

지방의회는 지금, 민주화를 향한 ‘열망의 30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도약의 30년’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30년을 준비할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할 ‘희망의 30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발전적인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회가 국가와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에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연대와 협력, 소통과 공유, 화합과 상생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국가적 의제를 한마음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구심점 역할을 해나간다면,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지탱하는 힘은 지방의회로부터 나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가 지방의회의 새로운 미래를 국민과 함께 그리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긍정의 자세로 코로나19가 종식될 그날을 힘차게 만들어나가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한

Contents

06 축사

15 특집기획

- 16 지방의회 30주년 역사
- 20 한눈에 보는 지방의회 연대기
- 22 카드뉴스로 본 우수조례

26 INTERVIEW

전환점 맞은 지방자치 ‘시민의 역량’이 열쇳말

28 소통과 연결

지방의회·세종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32 기고

자치분권 3법 개정, 주민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 마중물

34 어제와 오늘, 내일

사진으로 본 세종시의회 발자취

40 특집기획

- 40 키워드로 말하는 제3대 세종시의회
- 44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INTERVIEW

- 48 前 연기군의회 의장·세종시의회 부의장 이경대
- 50 세종시의회 초대 의장 유환준
- 52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 고준일
- 5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56 주요소식

역대 소식지에서 찾은 ‘의회를 빛낸 뉴스’

62 상반기 활동리포트

안정적인 회기 운영으로 효과적인 의정 활동에 주력

65 5분 자유발언

72 긴급현안질문

73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85 연구모임

89 주요 안건 처리 현황

90 시티투어

94 지역 언론이 본 세종시의회

96 주요 언론보도

98 회기안내, 홍보채널 안내

16

지방의회
30주년 역사



62

상반기 활동리포트



44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48

INTERVIEW
연기군의회 & 세종시의회
전현직 의장을 만나다



90

시티투어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지방의회 30주년 특집호
세종의회소식 통권 제30호

축 사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목소리를 오롯이
담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 한 종

안녕하십니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한종입니다.

모든 협의회 구성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속적인 요구 끝에,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30여 년간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쾌거이자,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나아가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로써, 지난 노력과 성과들을 양분 삼아 미완의 과제들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시도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의 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 끝지않게 중차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지방소멸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권은 주택문제·교통난·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방은 지역경기 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정책의 적극적인 실행이 절실하며, 동시에 수도권 과밀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기틀 마련과 국가균형개발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세종시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힘을 보태온 물론 향후 국가시책과 법·제도 개선에 있어 전국 17개 시도의 목소리를 오롯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본격 지방분권 시대, 지역 중심 균형발전 강화 해야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소식지 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조영훈입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감이 누적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이 늘어나면서 점차 희망의 기운이 짜르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예전의 자유로운 만남이 있는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제도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건국 초기 정치적·사회적 혼란과 6·25동란으로 인하여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최초로 민주적 지방의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그 이후, 제2대, 제3대 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되었다가, 6·10 민주항쟁의 성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되었고, 지난 4월 15일을 기하여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주민의 실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정책, 예산, 입법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주민의 직접 조례발안 등 주민 참여권을 신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성과를 일궈내 본격적인 지방자치, 지방분권시대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상호 격차와 균형을 통한 상생협력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심의 인구집중과 저출산 고령화로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불균형은 지속되고 있어 농촌 지역은 소멸이라는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중대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첨경은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통한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 정체성을 찾고 예산과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재정분권, 자치분권 실현이야 말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크게 도약 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러한 문제해결과 더 나은 대한민국 건설과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며 생활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선도 의회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축 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는 풀뿌리를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굵직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강 준 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국회의원 강준현입니다.

1991년 다시 시작한 지방자치시대가 어느덧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30년동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기점으로 새로운 30년을 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보편적인 정책의 한계점을 벗어나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소통하며 보다 생생한 민의를 제도로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인구 감소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에 빠져있는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면서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더많은 재정적 행정적 자율을 부여하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되며 수동적인 수혜자의 역할에서 주체적인 참여자의 역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는 풀뿌리를 넘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굵직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로 출범한 세종시는 자치분권의 상징도시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진정한 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춰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세종시민들이 함께 해야합니다.

세종시의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지방의회의 발전 그리고 지방자치의 성장을 위해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지방의원님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의회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줄기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홍 성 국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갑 국회의원 홍성국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해온 지방의회가 있었기에 우리는 대의민주제의 참뜻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며 세종시의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방분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권력을 독점하려는 자들에 의해 고초를 겪었고, 1961년에는 5·16 군사정변으로 아예 해산되기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활한 지방의회가 온전한 주민주권 속에서 3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해졌다는 것이 느껴져 감격스럽습니다.

4·19 혁명부터 촛불혁명까지, 우리는 위기 속에서 떨떠름쳐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중앙의 권력을 분산시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하고, 분산된 권력은 주민 자치의 영역에서 건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방의회의 의무이며 지방의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30년 간 그래왔듯, 지방의회가 앞으로도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탱하는 든든한 줄기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깃든 도시입니다. 그만큼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탄생한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그랬듯 세종시의회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시키고, 참다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시행으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도 지역주민에게 헌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국회와 지방의회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지역의 목소리가 빠르게 정책에 반영되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을 더 나은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아 더 큰 변영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방향

세종특별자치시장

이 춘희

안녕하세요,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37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일상을 돌보고 계신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세종시의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방의회 30년을 계기로 지방자치가 시민 한분 한분의 삶에 얼마나 깊고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린 지방의회 첫 선거가 치러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는 직접 민주주의의 큰 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종시의회는 출범 이후 행정수도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실현해 나가는데 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지방자치제도 역사에 남을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이 부여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한층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와 우리 시는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시민중심의 자치분권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안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지방자치 역량을 제대로 갖추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실현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시민 생활 속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가 시민 가까이에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늘 시민 곁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지방의회 30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저도 세종시의회를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사



지방자치 30주년을 축하하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된 이후 30년이 지난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어느덧 또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추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의 중심에 세종시가 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출범한 우리 세종시는 그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급의 일을 우리 반 친구들이 가장 잘 알듯이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들이 가장 잘 아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는 만큼 지역을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과 복지가 늘어나고 주민행복지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미래 지방자치의 큰 축이 될 우리 아이들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지방자치 30주년을 축하드리며,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축 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 순 은

2021년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난 30년 동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지방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신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기까지의 30년은 자치단체 중심의 권한과 책임을 제도화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토대를 마련한 지방자치 1.0의 시대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평화적 정권교체, 행정정보 공개조례, 주민참여예산제도 등 민주적 제도와 주민 눈높이의 지방행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 성과가 있었지만, 임명직 강단체장-선출직 약의회 구조로 시작이 됨에 따라 대부분의 행정권한이 임명직 단체장에게 부여되었으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마저 단체장에게 귀속되는 등 한계점이 존재했습니다. 1995년 임명직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변경되지만 이러한 기본적 틀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틀을 바꾸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 참여를 명시, 단체자치 중심의 지방자치를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전환하였으며, 주민 주권의 사상과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자치사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지도·감독의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자치 분권을 실질화하여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완성해 나가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자치분권 구현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장에게 지방의회의 직원 인사권을 부여하였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충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의정활동정보 공개, 윤리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주민신뢰가 제고되리라 기대합니다.

지방의회는 자치분권의 한 축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재개되어 지방자치의 명맥이 이어져왔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 사 열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세종시의회도 연기군의회 시절을 포함하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으로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민의의 전당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를 지역행정과 정책에 담아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바람직한 정책을 형성하는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주민들은 참여와 민주 의식이 고양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 획기적인 주민주권의 구현 등을 통해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정치·제도적 분권뿐만 아니라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도 중요합니다. 민주의식 성숙과 기술진전에 따라 다양화되는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정통한 지자체와 지방 의회가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행복중심복합도시와 기존의 읍·면 지역 간에 발생하는 격차의 해소방안으로 로컬푸드 운동과 각종 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모범사례라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주도성의 획기적 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지역 자립을 위한 핵심 인프라·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성장 사업을 시도 주도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성장계획, 지자체가 다부처 묶음사업을 기획한 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평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중점 과제인 초광역협력사업과 지역균형뉴딜도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등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종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국가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두발자전거의 앞바퀴 뒷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 합니다. 한 세대가 넘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성숙해 나아가는 동시에 균형발전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지방의회의 활동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축 사



주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주민자치를 꿈꾸며

한국자치행정학회장

황 성 원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도입되었던 지방자치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고, 30년 만에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또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지방자치법이 전문 개정 형식으로 변화를 도모하였지만, 여전히 이상적인 지방자치의 모습까지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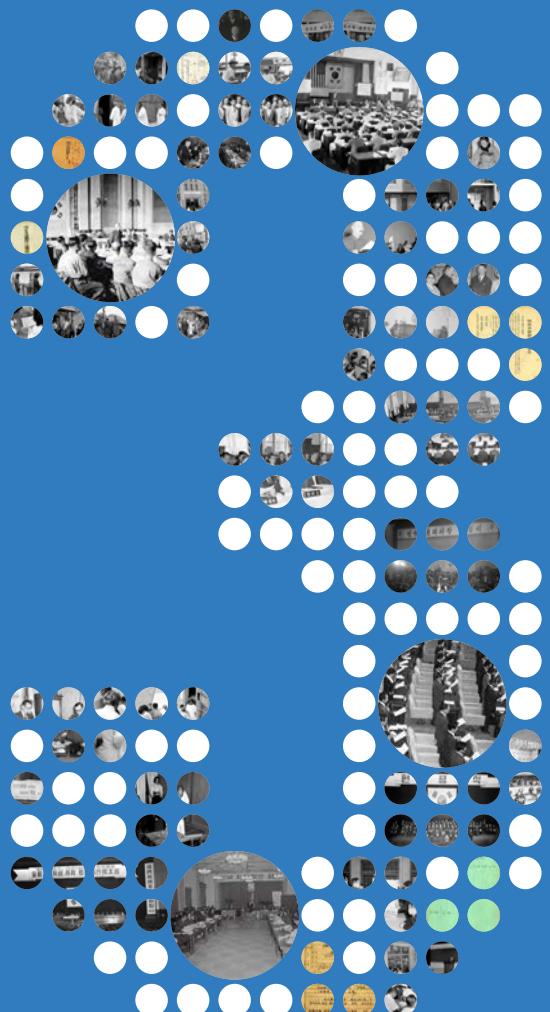
지방자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이자 관습인 민주주의를 생활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오랜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일종의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출발점에서 보다 넓은 차원의 공익을 위한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모두가 기존의 사고나 태도를 먼저 개선하고, 서로의 본분을 잊지 않으면서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인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열망이 커질수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책임감 있게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소수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 스스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주민자치 메카니즘의 변화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자치행정학회는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학회로써 지방자치를 이론적·실천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사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한 세종시의회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이에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귀 기관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방의회 30년 특집기획



지방의회 30년을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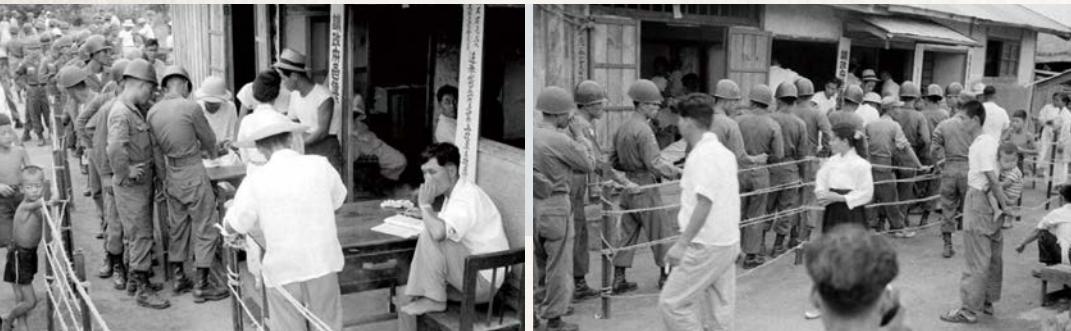


SPECIAL THEME

우리나라는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기까지
숱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국가 운영 체계가 안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시대 상황 속에서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방의회를 지키려 했던 노력과 헌신들이
있었기에 '지방의회 3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이할 수 있었다.
민주화를 향한 열망에서부터 권력분립을 지키는 주민자치 정착까지
지방의회가 걸어온 역사를 되돌아봤다.

민주화 열망부터

주민자치 정착까지 지방의회 30년의 역사



1956년 당시 선거 모습

전쟁 중 지방의회 선거가 이뤄진 까닭은?

1948년 광복 이후 제정된 건국헌법에 따라 지방의회 설치가 보장됐다. 그 이듬해인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설치에 대한 법률적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한국전쟁 불발로 지방의회 출범이 멀어지는 듯했다. 전쟁 중이었던 1952년 4월과 5월 당시 정부는 부산을 임시수도로 정하고 피난 상황에서도 지방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최초의 민선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 필요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거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당시 지방의회 선거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치안 불안 등의 이유로 1952년 4월 25일 17개 시와 72개 읍, 1,308 개 면에서 시와 읍면 의회 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이어 5월 10일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을 뺀 7개 도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됐다. 서울시와 경기도, 강원도의회는 제2대 의회가 출범했던 1956년에 이르러서야 제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불화와 반목으로 지방자치제 위기를 맞다

당시 지방자치제도는 도입 초기에도 권력분립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회 해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제도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대립각이 날카롭게 세워지면서 제2대 지방의회에 이르기까지 숱한 부침을 겪어야 했다. 실제로 1952년 4~8월 사이에 전국 시장과 읍면장의 79.6%가 임기 전에 사임했고, 반대로 지방의회 불신임의결은 66건, 의회 해산은 18건에 달했다. 제2대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1956년 2월과 7월 두 차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당시 자치단체장 불신임의결권과 의회해산권이 폐지되었으며 시장과 읍면장의 선거 방법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를 꾀했다.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같은 해 12월에 직접 선거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구성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에 전기가 마련되는 듯 했으나 1961년 5·16으로 제3대 지방의회는 불과 5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60년
전국시·도의원선거투표

30년의 긴 휴면에서 깨 지방의회

대통령 직선제 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거세지면서 1987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시국 수습을 위한 6·29 민주화 선언을 했다. 집권층의 공개적인 민주화 선언을 계기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으며 군부 독재에서 벗어난 직접 선거 방식으로 제13대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1990년 12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 의원과 6월 20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폐지 30여년 만에 지방의회가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995년 6월에 실시됨에 따라 인정된 지방자치제도 운영에 따른 지방분권 정착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자치단체장 선거 이전까지 주민 직접 선거 방식의 지방의회 구성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방식이 고수되면서 지방자치제 운영에서 중앙 집권적인 체계를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1년은 오늘날 지방의회 30주년을 있게 한 ‘지방의회 부활의 원년’으로 지방자치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인 시기로 기록돼 있다.



1987년
헌법개헌 국민투표



1991년
지방의회 기초선거 합동 유세

1994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열다

1994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95년 6월 27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을 통합해 지방선거를 실시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1일 주민이 직접 뽑은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당시 선거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법과 국회의원 선거법,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을 하나로 통합함에 따라 제2대 지방의회 임기를 3년으로 규정했다. 또한 지방의회 관련 선거법에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을 허용해 지역구 의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게 했다.

1998년 6월 4일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고 임기 4년의 제3대 지방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1999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상임위원회의 의안발의권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또한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제척 대상 범위로 배우자와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에 내실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변화와 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전국 지방의회 간 교류와 논의의 장이 법률로 보장되면서 2000년 3월과 6월에 각각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신)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법률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
6·27 지방선거 개표 모습



1999년
지방자치 50년 기념식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된다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법 개정으로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 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각각 1표씩을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제4대 지방의회 의원 구성부터 적용됐다. 특히 시도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 절반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명부 순위 1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해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지방의정활동기반 혁신계획’을 추진했다. 그의 일환으로 2003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직을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월정수당을 적용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유급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또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 인사권 강화 등 지방의회 활성화 추진 의무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특히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회기 운영 및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자율화되었고 각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을 증원하는 등 전문위원회제도를 활성화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7년 제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모습



2019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정책토론회

지방의회 법적 지위 '주민 대의기관'으로 명문화

제4대 지방의회 들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다각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마련된 주민소송제도가 대표적이다. 2005년 8월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공직선거법'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직이 유급직으로 변경되면서 제6대 지방의회부터 겸직 조건과 겸직 신고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시작했다. 국회법 규정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서 안전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제5대와 제6대 지방의회를 맞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방의회는 광범위한 성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2011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시도와 시군구 각각 10일에서 14일, 7일에서 9일로 확대되었으며 서류 제출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2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특별자치시 의회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의회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4년 1월 21일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방의회, 희망의 30년을 준비하다

대한민국은 2022년 1월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주민 대의 기관으로 발돋움해온 지방의회가 인사권과 재정권 등의 한계로 충분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의회 활동에 제약을 넣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결과다. 이는 제7대 지방의회는 물론 현재 후반기를 맞고 있는 제8대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기대와 바람이기도 했다. 시행을 6개월여 앞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장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정책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는 이른 바 '자치분권 2.0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TF 구성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향한 지방의회의 노력이 주민들의 희망을 오롯이 품은 '역사적 여정'으로 기록되길 기대해본다.



2021년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한눈에 보는 지방의회 연대기

도입기



지방장관회의(1950)



한국의 지방선거(1952)

1948

7월 17일

제헌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 포함

1949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1952 4월 25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 실시
5월 10일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1956 2월 13일

「지방자치법」 제2차
개정으로 시·읍·면장의
주민직선제 채택 및
임기 단축(4년→3년)

8월 8일

시·읍·면장과
의회의원 선거 실시

8월 13일

서울특별시와
도의회 의원선거 실시

부활· 발전기

1990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제8차 개정을 통해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의회 구성,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규정

1987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법률
유보조항 삭제

1980 10월 27일

제8차 헌법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구성을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구성 시기는
법률에 위임

1972 12월 27일

제7차 헌법개정으로
조국통일까지
지방의회 구성 보류



헌법개헌 국민투표(1987)

1991

3월 26일
기초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6월 20일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선거 실시

1992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방침
발표

1994 3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1차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995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도록 규정

1995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실시



기초의회 개원식(1991)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차
개정을 통해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 변경



지방자치제도 선거 유세(1995)



지방의회 30주년

당신의 삶을 바꾼 우수조례

(사)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역대 수상조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제8~17회 단체 부문 수상 조례, 시행일 순



‘생태교통’ 시범도시 기반 마련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03.28.]



01

이 조례는 수원을 생태교통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유기농 명인 지정받고, 생태전남 위상 세우고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시행 2016.04.07.]



01

전라남도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발전시켜온
도민이 명인의 자격을 인정받고
그 기술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치법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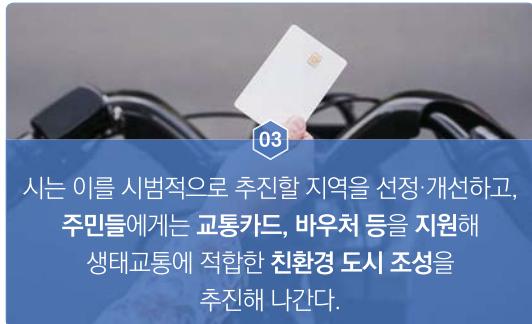
02

법규에서 말하는 ‘생태교통’이란 걷기, 자전거 등
무동력 교통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 및 경전기차량의 이용을 결합한
포용적인 교통을 말한다.

02



‘유기농 명인’은 오랜 경험과 연구를 통해
전통농법과 현대과학을 접목,
저비용의 유기농 선도기술을 체계화해
온 사람을 뜻한다.



03

시는 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지역을 선정·개선하고,
주민들에게는 교통카드, 바우처 등을 지원해
생태교통에 적합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추진해 나간다.

03



벼와 밭작물, 과수, 축산 등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실천해 온
명인을 지정·지원함으로써 생태전남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지방의회의 꽃은 자치입법으로 활짝 피어난다. 우리 마을, 우리 시·도에 맞춤한 자치법규가 탄생했던 순간,
그리고 우리 삶에 스며들었던 시간. 역대 우수조례를 통해 되짚어 본다.



‘누구나 온누리공주시민’ 도농교류 촉진했다

공주시 온누리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08.]

 01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이버시민제도의 탄생을 알렸다. 누구나 온누리공주 홈페이지에 등록해 ‘온누리공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제도다.

 02

특히 도농 간 상생의 정보교류를 목표로, 공주시의 소상공인과 문화예술 기관·단체, 체험 마을 등이 온누리공주를 통해 자신만의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03

온누리공주시민이 되면 각종 할인 서비스와 문화·행사 초대, 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지역 우수인재는 취업 지원, 참여기업에는 자금 지원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2.15.]

 01

이 조례는 지역의 우수인재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02

정부의 고용정책 기본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시는 이에 따라 지역 우수인재 등을 우대하는 취업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03

참여기업에는 고용보조금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참여를 독려해 취업난과 구인난을 동시에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의회 30주년



제주 말 잘 키워서 도민 삶의 질 높인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01.13.]



01

이 조례는 말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02

육성사업 지원에는 사육시설, 조련시설 같은 기반시설과 승마 저변 확대를 위한 비용, 말산업의 6차 산업화, 말산업 수출 등이 포함된다.



03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국내외 관련 기업 유치, 말시장 개설 등이 명시돼 있다. 제주의 말 문화를 창달하고 말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해 지구온난화 대응한다

광주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시행 2020.06.01.]



01

광주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다.



02

기존의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가 아닌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신에너지' 풍력, 수력, 태양·해양·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재생에너지'가 대상이다.



03

이런 대체에너지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지구온난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사각지대 놓였던 ‘정신건강’ 치료와 회복을 책임진다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7.15.]



01

이 조례는 경기도 도민이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 차원에서 **책무와 대응체계,**
지역사회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02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자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도민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03

이에 따라 도는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 협의체,**
쉼터 등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확립,**
민간·공공의 협력으로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하게 된다.



주민 손으로 만드는 ‘으뜸마을’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시행 2021.01.01.]



01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02

창원시를 ‘환경수도’로 만들겠다는 기치 아래
마을주민은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03

이에 따라 창원시는 **관련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주체자가 되는 주민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문가·교육·네트워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환점 맞은 지방자치

‘시민의 역량’이 열쇳말

충남대학교 행정학부
최진혁 교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50년 전 미국 대통령 존F. 케네디의 취임 연설이다. 이 말은 결코 시민의 의무만을 요구하는 선전 문구가 아니다. 인류 번영을 위해 시민이 정치권력을 감시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시민의 역량’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열쇳말이라는 최진혁 교수가 인터뷰를 마무리할 즈음 소리 내 강조한 말이기도 하다.

정치권력 감시, 그리고 시민의 역량.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최 교수가 제시한 이 두 가지 이정표를 따라가 본다.



Q. 지방의회 부활 30년이 갖는 의미를 물고 싶습니다.

부활에 주목해보자. 지방의회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다. 죽었던 시기를 되짚어보지 않고는 이 의미를 알 수 없다. 1948년 정부수립 당시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 규정화했다. 이듬해 지방자치법이 제정됐고 우리는 6·25 전쟁 상황에서도 첫 선거를 치렀다. 제1공화국부터 자치 경험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제2공화국에서는 부정선거에 지방자치법을 이용한다. 권력을 장악하는 도구로 변질했다. 이후 군사정부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지방의회가 해산(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지만(제3공화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유신헌법을 공포할 당시에도 지방자치 관련 헌법 부칙은 있었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을 할 때까지 허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서 명분만 세웠을 뿐이다.

Q. 자치권을 되찾는 것과 민주주의 역사는 궤를 같이하고 있네요.

제5공화국에 와서는 지방자치를 안 할 명분을 더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방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부칙조항을 만들었던 거다. 열어놓기는 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6·29선언(군부정치 종식)이 있기 전까지 지방자치는 죽어있었다.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헌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부칙 고리표를 빼고(지방자치 실시에 관한 법률유보조항 삭제), 이듬해인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에 이른다.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다. 근대적인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후, 시간이 면면히 흘러 비로소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이다.

Q. 지방자치에 대해 지난 역사가 말해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요.

우리 근현대 역사 속에서 지방자치는 정부 권력의 도구에 불과했다. 정치권 이해득실에 따라 지방자치 권력을 일부 내놓는 형식으로 겨우 열매를 맺었다. 여대야소, 여소야대에 따라 중앙정부가 이 권력을 줄지 둘고 갈등이 반복됐다. 1988년 전부 개정한 지방자치법도 관치법에 가까웠다.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없는 곳부터 선거를 하려고 했다. 지금은 낮설지만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자치단체장은 정부가 임명했었다. 1995년이 되어서야 민선 1기가 처음 출범한 것이다. 이후에도 물밑에서는 지방의회를 하나의 정권 교체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방자치의 근본인 ‘주민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실상 자치 정신을 훈련하지 못했고, 주권재민 의식을 결집하지 못했다.

Q. 주민과 지방의회의 역할, 그리고 이 관계에 새로운 관점을 주셨는데요.

지방자치제도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 사상, 시장경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됐다. 수요자 중심, 고객지향적 서비스처럼 행정도 고객을 다루는 것처럼 변했다. 하지만 공공영역은 경영분야처럼 인풋대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다.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구호는 넘쳐나지만 결국, 주민이 바뀌어야 의회도 바뀐다. 참여정부 때 47개 지방분권과제 중 하나로 ‘우리 지역에 맞는 정부구조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취지로 의회 구성의 다양화를 추진했었고, 현재 다양화 법률안이 행안부 분권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지방자치 3법 개정이 이뤄졌고 전환기를 맞이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은 75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생활밀착형 치안제도가 둑을 올리는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 여기에서 자치의 정신이 다시 태어날 것이다.

Q. 지방의회 30주년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지방의회 없앤다고 하면 주민들이 ‘나를 밟고 가라’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 현재도 주민과 괴리되어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 기적과도 같다. 나는 이걸 의사(疑似) 민주주의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강시장약의회’ 구조로는 지방자치는 절름발이와도 같다. 의회가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주민이 빠져있다. 우리가 동력이 되어야 한다. 지난날 통해 우리는 빠져진 교훈, 민주화를 열망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려웠을 때 무엇으로 이 자리에 앉았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자치분권 2.0 시대, 민주주의 도약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 레벨업 하기 위해 국가, 지방정부,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 시민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견제자 감시자 주체자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 선임(2019)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근정포장(2018)
한국지방자치학회 제22대 회장
한국정부회계학회 제8대 회장

시민에게 물었다

지방의회·세종시의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에게 지방의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지방의회가 더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견제와 감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 주세요

세종시 새롬동 / 박영규(64)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기능입니다. 자체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민들의 우려를 씻어내 주세요.



부지런히 발로 뛰어 민심을 살펴주세요

세종시 새롬동 / 김정옥(47)

지방의회는 시민의 바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발로 뛰고 민심, 지역을 살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업·상인 위한 정책으로 지방의회 힘 실리길

세종시 반곡동 이주왕(26)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 세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종시에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성장하면 곧 지방의회의 힘도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에 있는 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주세요.

시민이 지방의회의 주인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세종시 다정동 / 박지선(42)

우리가 맘껏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공짜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방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갖는 의미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한쪽으로 쓸리는 권력을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시민의식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올해 30주년을 통해 시민이 지방의회의 주인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약 이행 과정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주세요

세종시 도담동 유관우(46)

먼저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분들이 약속했던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현재 이런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행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린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시정 발전을 위해 힘내 주시길 바랍니다!



늘어나는 인구… 출퇴근길 교통 문제 해결방안이 궁금해요

세종시 새롬동 / 박종현(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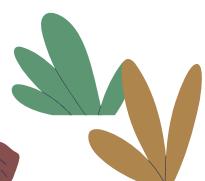
먼저 세종시민을 위해 일해주시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출퇴근길 차량정체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입주아파트가 더 많아지면 이에 따라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결방안이 있다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주세요

세종시 새롬동 / 김순진(63)

열려 있는 행정으로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빠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정 편의가 아니라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수도의 면모에 걸맞은 도시로 성장하는데 역할을 해주세요

세종시 나성동 / 이현옥(49)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출범한 행정수도입니다. 그에 걸맞은 도시의 모습으로 가꿔야 합니다. 일과 여가생활이 공존하고,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한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의제를 제시해 인구 50만,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데 의회가 참다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정책 많이 탄생하길

세종시 중촌동 / 임성진(39)

세종은 젊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로 평균연령이 제일 낮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이 즐길만한 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먹거리 위주의 상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문화 활동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프로그램이 부족합니다. 젊은 세대에 맞는 정책이 많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진영 논리 넘어 행복도시 만드는데 주력하길

세종시 고운동 / 김현희(43)

세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획도시입니다. 따라서 진보, 보수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진정한 행복도시로 갈 수 있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교통, 웰빙 관련 기반시설 보완과 세종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업 및 대학 유치에 힘을 많이 써주세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도시로 이끌어 주세요

세종시 종촌동 / 정승혜(46)

지금 세종은 행정수도로서의 모습보다는 부동산 문제와 같은 이미지와 이슈로 들썩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는 도시답게 행정과 경제가 비전을 가지고 발전하는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 미래가 있는 도시로 이끌어 주세요.



자치분권 3법 개정,

주민자치 중심의 ‘자치분권 2.0’ 시대 마중물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1952년 지방의회 의원선거 실시로 처음 탄생했으며, 1960년 12월 제3대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1961년 박정희에 의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약 30년간 중단되다 1991년 다시 부활되었다. 다만, 1991년부터 ‘강(強)단체장(임명직)’ vs ‘약(弱)의회(선출직)’이라는 지방자치 구조의 출현으로 지방자치단체장(1995년부터는 선출직으로 바뀜)이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인사권마저 틀어줘는 이른바 ‘관치행정’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조는 기관대립형인 ‘강시장-약의회’ 형태를 띠고 있어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치분권 3법 개정의 의미

혹자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건설적인 대안을 통해 비판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밀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말 '자치분권 3법-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일괄이양법제정안, 자치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틀이 단체자치중심에서 주민자치중심으로 크게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로소 주민주권의 자치분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올해 1월부터 시범실시단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학교나 가정폭력, 생활안전, 지역교통, 아동학대 범죄 수사 등 치안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현지체감정도는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참여의 능동적 주체가 되는 '자치분권 2.0'의 시대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 관련법규 구체화 해야

자치분권 3법 가운데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1월 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고 내년 2022년 1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의회와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자율성 확대(법 제 103조)이다. 둘째,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법 제41조)이다. 셋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법 제 66조)이다.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

다. 이는 지방의회의 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사무 직원들은 자치단체장이나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 인사 전반에 대한 권한을 지방의회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도의회 등 광역의회는 물론 시·군·자치구 등 기초의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인사권의 독립 시행을 위한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추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 및 운영에 대해 개정 지방자치법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재직의원 총수의 1/2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개별적인 전문 인력지원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것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해서 개정 지방자치법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생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 소속 의원의 윤리성 담보를 위해 이전에 지방의회의 '비상설기구'였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바꾸었으며 위원회 산하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제 식구 감싸주는 솜방망이 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보다 균형적인 시각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의 대표기구로서 지방의회가 책임성과 자율성, 그리고 윤리성을 담보하고 이를 통해 집행기구에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M. Moore나 B. Bozeman 등 공공가치론자(public values theorists)들이 실파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거쳐, 지방의회는 집행기구와 함께 공공가치(public values) 창출에 동참하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중앙일보 신문기자를 거쳐 국정홍보처에서 일한 후, 2004년부터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거버넌스학회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한국행정학회 부회장과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연구분야로는 지방자치론, 리더십론, 인사/조직이론, 공공가치론 등이 있다.

사진으로 본 세종시의회 발자취

'사진 속에는 현실이 있고 이것은 때때로 진짜 현실보다 더욱 현실적인 불가사의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명언이 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긴 그 때 그 시절 지방의회의 모습은 같은 길을 걸어왔던 전국 지방의회와 나아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다.

연기군의회
시절
—
1991~2011

1991

>>

1992

1대_연기군의원 선거합동연설회



지방의회 시대 다시 열렸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세종시의회의 전신이었던 제1대 연기군의원 선거를 위한 합동연설회에 많은 주민들의 눈과 귀가 쓸려 있는 모습이다.

1대_제1회 개회식



연기군의회 첫 임시회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1991년 4월 15일에서야 비로소 연기군의회 제1회 임시회가 열릴 수 있었다.

1대_제13회 집회공고



지방의회 회기 일정을 알리는 법

연기군의회에 설치된 공공 게시판에 제13회 임시회 집회 공고가 붙어 있다. 당시 인터넷 등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공식 일정을 알리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1대_제20회 개원2주년 연회



지방의회 부활 이후 2년을 되돌아보다
연기군의회 개원 2주년 연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
그해 역사적으로 문민정부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도
파악할 수 있다.

1대_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간 교류를 위한 의장협의회 회의
제1대 지방의회 출범 이후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각 지방의회의 의제를 논의하고 협력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1993

1994

>>

1995

>>

1대_지방의회 의원 세미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열공 중’
1994년 9월에 제7차 지방의회 의원 세미나가 열렸다.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열리지 못한 탓에 당시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2대_제39회 개원식



역사는 반복되지만, 발전해나간다
제2대 연기군의회 개원식이 열렸다. 이전에는 없었던
의회기가 눈에 띈다. 특히 현장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영상 촬영 모습이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2대_제61회 의원 임기 마감



의정활동의 끝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다
제2대 연기군의회가 공식 일정을 마치면서
그간 함께 활동했던 의원들이
서로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모였다.

4대_제107회 여고견학



의회를 찾은 여고생들
제4대 연기군의회 시절 학생 견학을 통해 지방의회를 체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의회 등 의회 체험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졌다.

연기군의회
시절
—
1991~2011

1998

2000

>>

2003

2004

3대_제84회 현장방문



제3대 연기군의회 의원들, 현장을 찾다
제3대 연기군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

4대_제123회 의회 신축청사 기공식



연기군의회 신청사 시대의 첫 삽을 뜨다
2004년 연기군의회 신청사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4대_제125회 신행정수도건설사수



국가균형발전 위해 행정수도 건설하라!
제4대 연기군의회 당시 제1차 신행정수도건설 사수를 위한
연기군민 월기대회가 진행됐다.

12.29. 신청사 준공식



연기군의회 신청사 시대 개막

2005년 12월 제4대 연기군의회 시절 완공된 신청사 준공식 모습.

12.09. 세종시 설치법 국회통과 환영사 및 성명서 발표



세종 시대 열린다!

2010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세종시 설치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당시 연기군의회 의원들이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환호하고 있다.

2005

>

2009

2010

>

02.19. 세종시설치법 조기제정촉구 연기군민궐기대회



세종시설치법 조기에 통과시켜라!

2009년 세종시 설치법을 조기에 제정하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연기군민궐기대회'가 열린 모습.

07.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식



역사적인 세종시의회 개원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제1대 세종시의회가 개원식을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출범
—
2012~현재

2012

2014

2017

04.12. 세종시의회 개청식



세종시의회 보람동 신청사 시대 개막

제2대 세종시의회가 조치원 신청사 시대를 마감하고 보람동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보람동 신청사 개청과 함께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라는 의정 목표가 담긴 현판을 설치했다.

07.01.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취임식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 취임

2014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취임했다. 당시 취임식에는 현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전 국무총리, 권양숙 여사 등이 참석했다.

02.22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강릉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홍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길거리 홍보

제2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행정수도 세종’의 명문화를 위해 강릉시에서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06.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 열자!

2019년 6월, 세종시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지지하는 전국 지방의회 의장들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참했다.

2018

>>

2019

2020

07.02 개원 전의원 기념촬영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

2018년 7월 제3대 세종시의회가 개원했다.
제3대 의원 정수는 기존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11.10.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세종시 전국 시군구 의회대표 공동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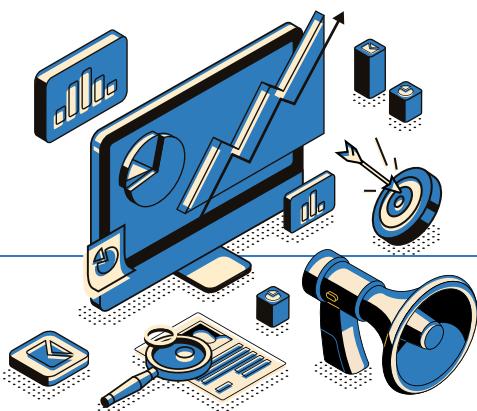
행정수도 완성에 힘 모은 전국 지방의회

2020년 11월 세종시의회는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세종시의회는 같은 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키워드(#) 로 말하는 제3대 세종시의회

제3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일 출범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3년차를 맞은 제3대 세종시의회는 도시계획상 2030년 도시 완성 단계에 연착륙하겠다는 각오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도시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을 모색해왔다. 제3대 세종시의회의 땀과 노력이 깃든 의정활동의 모든 것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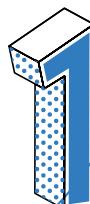


지역 경기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각종 경제활동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도시 형성 과정에서 인구 대비 상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져 상가 공실률 문제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쳐왔다. 세종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김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구매 촉진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상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역업체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정주 여건

정착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

정주 여건은 주택과 교통, 교육과 보육, 일자리 등 도시에 안착해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총칭하는 말이다. 삶의 질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안정적인 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과 보육 서비스 개선에 힘써왔다.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급 조례안’ 제정으로 육아 휴직한 남성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공공 교육 분야에서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교통 등 이동수단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시정 개선 요구도 다방면으로 이뤄졌다.

손인수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를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는 등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률 향상 방안을 수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주택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다.

안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 및 적정 분양가격 산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지난 2019년 7월 첫마을 4단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최초로 조기 분양되는 성과를 거뒀다.



선도사랑

도시 변화와 미래에 대비한 정책적 시도

세종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출범 취지에 걸맞게 도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미래 사회를 빨리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해왔다. 이윤희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치시설 운영을 통한 아이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평생 구강건강 실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시는 양치 교실 운영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의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노종용 의원 역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상가밀집지역에 건물 식별번호를 표기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건물 식별번호 표기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상권 활성화, 안전사고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법적 근거를 선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세종시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례도 눈길을 끈다. 유철규 의원은 공직사회의 청렴의식과 반부패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세종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또한 차성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을 받았다. 이영세 의원 역시 디지털 기기 등을 매개로 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선제적으로 대표 발의했다. 기대수명 연장이라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한 입법 활동으로 사각지대 없는 정책 지원을 규정한 사례도 있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이 조례에 신중년의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지원을 규정했다.

도농복합도시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그리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다. 세종시의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모델 확립을 위해 필요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업 관계자 및 임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임업 관계자의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재현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읍면 단위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에너지 공급 인프라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손현옥 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지역에 비해 낙후된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견 제시 역시 주목을 받았다.

채평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나눔주차장 확대 시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5



열린의회

정례 언론 브리핑으로 시민 접점 확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표어는 '행정수도 완성, 시민중심 열린의회'다. '시민중심 열린의회'라는 문구에는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 충실한 의회 운영에 대한 의지와 각오가 담겼다. '성과로 말하겠다'는 이태환 의장의 취임일정은 실제 변화로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64회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기로 했다. 정례 브리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작됐지만, 향후 코로나19 진정세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와 제한된 대면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의정 브리핑을 그간 활동 내용과 회기 전 주요 안건, 쟁점 사항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전달 채널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회기 전 열리는 정례 브리핑은 물론,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 브리핑을 통해 의회의 공식 입장 전달과 세종시 주요 의제 공론화에 힘을 싣고 있다.

이태환 의장은 "정례 브리핑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밟거름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소통과 화합, 이해와 설득의 과정들이 의정활동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시민·전문가와 함께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10선을 선정했다.
선정은 지난 5월 기관별 후보 조례 발굴 및 추천,
세부 성과 작성과 6월초 의정모니터단 의견 수렴에 이어
6월 8일 20개 후보 선정과 6월 10일~14일 시민 투표를
거쳐 이뤄졌다.



제15회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 수상

국무조정실 주관 2018년 운영성과 최우수

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4. 1. 10 제정)

선정사유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조성 및 도농상생 가치 실현에 기여

주요성과

- '15년 직매장 1호점(도담점) 및 '18년 2호점(아름점) 개장,
3,4호점 개장 추진 중
- 로컬푸드 개장 5년만에 누적매출액 1,138억원 돌파,
회원 수 50,715명 확보

2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7. 20 제정)

선정사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지역이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공동체 돌봄문화를 확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여건
마련에 기여

주요성과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3개소 → 13개소
- 연간 이용자 : '16년 28,328명 → '17년 64,497명 →
'18년 148,637명 → '19년 200,469명
- 장난감 대여서비스 이용건수 : '16년 4,672건,
'17년 9,006건, '18년 24,728건 → '19년 200,469건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 제정 이후 31개 자치단체에서
속속 제정 및 정책 도입



2020년 지역농산물 공급률 35.4% 달성

3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016. 6. 20 제정)

선정사유

공공급식 식재료가 지역의 우수한 먹거리로 공급될 수 있는 체계 확립

주요성과

- 「세종시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 ('20년 10월)
- 관내 유·초·중·고 137개교 및 정부청사 구내식당 (10개소 5,940명)에 지역생산 식재료 (농·수·축산물 및 가공) 공급

4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2013. 6. 10 제정)

선정사유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성과

-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수 : '13년 3,077명 → '15년 8,679명 → '18년 33,508명 → '20년 42,550명
- 운행 차량 수 : '13년 4대 → '15년 8대 → '18년 13대 → '19~'20년 17대



장애인콜택시 이용 인원 매년 평균 5,600여명 증가



1인당 평균 독서율 전국 1위
(우리 시 10.3권, 전국 평균 7.3권)

4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2014. 12. 22 제정)

선정사유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서비스 제공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로의 성장 기반 마련

주요성과

- 시민 1인당 양서 수 : '15년 0.65권 → '20년 1.67권
- 복합 공공도서관 운영 : '14년 2개소 → '21년 11개소
-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 '17년 협력서점 5개소, 대출 13,507권 → '21년 13개소, 대출 누계 133,288권

특집기획

Special #4
조례 10선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2018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
국제안전도시 인증

6 안전도시 조례 (2014. 10. 30 제정)

선정사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 마련

주요성과

- 시민 주도 안전도시위원회 운영, 총 69회 회의, 안전취약 지역 점검 67회, 취약지 발굴 251건(개선 212건)
-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53.3%로 광역시도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최소 도시

7 대중교통 기본 조례 (2016. 12. 20 제정)

선정사유

신교통수단 및 최첨단 교통기반시설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성과

- 읍면동 노선 효율화 및 환승체계 강화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18년 9월)
- 수요 응답형 버스(DRT) 도입 : 두루타(읍면 33개 마을), 셔클(1생활권)



광역BRT체계 구축 # 수요응답형버스 도입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 최우수상

8 시민참여 기본 조례 (2018. 11. 12 제정)

선정사유

시민들의 실질적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구현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성과

- 시민주권회의 1기 출범('19.1.28) : 265명, 회의 284회, 안건 600건
- 시민주권회의 2기 출범('21.1.28) : 267명, 회의 25회, 안건 103건



9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2015. 7. 30 제정)

선정사유

세종시 대표 생활밀착 민원서비스인
「척척세종 -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근거 마련

주요성과

그동안 마을회관·경로당, 도로·교통시설 등
시민 생활불편사항 처리 총 누적 33,210건
(2015년~2021년)

2016년 국민통합 우수사례 우수상

2018년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정책 우수상

10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2019. 7. 19 제정)

선정사유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 협치 모델의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성과

스마트시티 국제인증(BSI) “4단계”(선도도시)
세계 최초 선정(20년 12월)



온라인 시민 투표 결과



순위	분야	발의자	조례명
1	농업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복지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3	농업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4	교통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4	문화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6	안전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7	교통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8	자치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9	안전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10	건설	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추진본부 설치·운영 조례

이경대 前 의원은 기초와 광역의회를 두루 거치면서 3선을 했다. 2006년 제5대 연기군의원으로 시작해 제6대 연기군의회 의장,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거쳐 2대 부의장까지 역임했다. 이 시기는 격변 그 자체였다. 이경대 前 의장은 세종시가 출범하기까지의 외풍을 온몸으로 겪고도 행정수도에 대한 갈망에는 변함이 없었다.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의 진가라는 그를 과수원에서 만났다.

시민에게 존경받는 의회 되어야죠

前 연기군의회 의장·세종시의회 부의장 이경대

Q.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의회에서 물러난 지도 6월 말이면 벌써 3년이네요.
10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 마지막에 3선 의원 몇이 모여서
'출마하지 말자.' '후배들한테 자리를 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공교롭게도 함께 이야기했던 의원들 모두 출마를 안 했어요.
그 후로는 나름 본업으로 돌아와 복숭아 농시를 짓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재밌어요. 7월부터 수확철이라 지금은
봉지 싸고 가지 숙이주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웃음)

Q. 연기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세종시 출범 전이라 쉬운 길은 아니셨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가 워낙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2004년 10월 21일)
이후부터 총청권이 전국적인 이슈였어요.
또 이 상황이 세종시 출범 때까지 길게 이어졌잖아요.
결국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어가는 과정이었고,
도시건설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수정안, 원안이
핑퐁처럼 오가면서 주민들이나 우리 연기군이나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우리가 바라는 행복도시가 될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뜻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마음 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던 때였지요.





Q. 세종시 출범까지의 힘겨운 과정을 몸으로 겪어오셨죠?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부터는 사실상 투쟁의 연속이었죠. 행정수도 관철하려고 군수부터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연기군의회까지 뜰뜰 뭉쳐서 규탄 집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의원 하나 빠짐없이 삭발까지 해가면서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를 벌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충남, 대전, 공주 합세해서 국회 집회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목소리를 냈지만 한계는 있었죠. 권한이 다 중앙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상실감도 컸습니다.

Q. 당시 주민들은 어떤 점을 가장 우려했었나요?

행복도시 특별법이 공포되고 나서도 예정지 범위가 계속 변경되니까 불안감이 제일 커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MB정부가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수정안을 2010년에 발표하면서 다시 객변을 맞이했죠. 균형발전이라는 큰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점점 역행하는 방향으로 변질하고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그해 6월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기는 했지만, 세종시 출범 전까지도 어느 지역까지 예정지에 포함하나 마느냐를 두고도 주변 지자체 간에도 의견이 다 엇갈렸거든요.

Q. 기초단위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겠습니까?

연기군이 면적은 작지만 주민이 5만이에요. 이 정도면 군 평균 인구라 국회에 가서도 '우리 인구가 이 정도 된다, 작은 게 아니다' 하면서

‘주민들 목소리를 잘 전해서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입법활동 등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잔여 지역 넣어달라는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지역 뺏기는데 뭐하러 그러냐면서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런 말들은 당시 의원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종시가 제대로 꿀을 갖춰 출범하는 게 가장 중요했죠. 그럼 우리는 ‘의원 안 해도 된다’고 큰 소리를 내가며 설득을 했고요. 과학벨트 후보지 발표 때 세종시가 배제됐던 것 때문에 다시 지역 민심이 들끓었는데요. 주민들이 단결해서 지금까지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온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Q. 선배로서 세종시의회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행정수도에 대한 갈망은 여전하죠. 언젠가는 당초 계획대로 가야 한다고 봐요. 수도 이전한 나라들 많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합쳐서 꼭 이뤄야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또 의회 탄생 목적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의원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들 목소리를 잘 전해서 그 결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입법활동 등과 관련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배려에 무게를 둔 생활정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5대 연기군의회 의원(2006~2010)
제6대 연기군의회 의장(2010~2012)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012~2014)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부의장(2014~2018)

‘뜨거운 가슴으로’ 주민들 만나야 합니다

세종시의회 초대 의장 유환준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15명의 합치.

여기에 새로운 특별자치시의 기틀을 잡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것.

초대 세종시의회에 주어진 임무였다.

출범 1년 만에 이들 의원이 제정한 조례는 무려 343건이었다.

이중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는 총 108건으로

당시 전국 평균 입법 발의건수의 3배를 넘겼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초대 의장으로 취임해 끊임없는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고 여러 시·도 의원의 합치를 끌어냈던

유환준 前 의장을 만났다.

Q. 요즘은 주로 농사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을 시작하면 미친 듯이 혼신을 다하는 성격인데,

의정활동을 하루아침에 중단하니까 몸과 마음이

갈 데가 없었죠. 농사일이 자식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 둑어주고 따주고 할 일이 넘쳐요. 그래도 참 행복해요.

식물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서

돌봐주는 만큼 보답을 하고 커 주니까.

사람한테 쓸는 정성과는 다르게 말이지요.

**Q. 세종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첫 의장을 지내셨는데 세종시 기반을 잡을 때니까
난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 크게 어려운 점이 있었다기보다, 당시 우리 의회 상황이 특별했지요.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회에서 온 의원들이 섞여 있었고 광역의회 경험이 있는 의원 저를 포함해 셋이었습니다.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만큼 각자의 경험을 살리고 이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많이 쓸았어요. 무엇보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태동이란 말이죠. 난제들이 많았지요. 특히 북부권에서는 중앙부처가 모여있는 곳에 시청, 경찰청, 교육청 등이 가니까 소외되는 걸 걱정하는 게 제일 컷죠. 늘 옥먹을 각오로 주민들 의견 반영하려고 큰 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Q. 당시 도농교류나 교육·의료 분야를 망라하고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로 출범하면서 젊은 공무원, 도시민들과 원주민 사이에 고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 경제관념이 다르죠. 초대 의회에서 제일 잘한 게 로컬푸드였어요. 지역 농민이 재배한 농작물을 균교농업 형태로 도시민에게 공급하는 로컬푸드가 세종시를 살릴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죠. 그 불씨가 지금 싱싱장터가 된 것이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행복청에서 직접 학교를 짓겠다는 거예요. 교육이 순서대로 건물만 짓는다고 다가 아닌데 말이지요.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반대 의견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교육청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입지를 결정할 때도 추진위원장으로서 후보지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도록 강하게 주장했는데요. 북부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Q.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할까요.

의회가 생동감이 있어야 해요. 하는 일이 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지역 의정활동은 머리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해요. 활발하게 순회하면서 주민들 의견, 고충, 건의 사항 하나하나 시정에 반영되도록 말입니다.



“
**주민을 대신하는 게
의원 하나하나의 몫이고,
원래 색이 다 다른 걸
합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주민들과 형님, 누님 하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 이렇게 됐어’라고 응답을 해줄 수 있어야죠. 또 ‘비판 없는 의회’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의견 충돌이 자꾸 밖으로 나와야죠. 주민을 대신하는 게 의원 하나하나의 몫이고, 원래 색이 다 다른 걸 합치는 것이 의회의 일입니다. 의견이 단순해지면 안 됩니다. 초기에는 공무원 조기 정착이나 세종시 출범에 모두 머리를 맞대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앞으로는 지역 전체를 아울러서 행정수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초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1991)
제7대 충청남도의회 의원(2002~2006)
제8대 충청남도의회 제2부의장(2006~2010)
제9대 충청남도의회 부의장(2010~2012)
제1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2012~2014)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 상임공동대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열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후반기 의장 고준일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7년 2월 조치원 청사에서 이전해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당시 제2대 후반기 의장이었던 고준일 전 의원은 보람동 신청사 개청을 계기로 연기군의회 경험을 살려 의회 운영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세종시의회 역사에 의미 깊은 족적을 남긴 고준일 전 의장을 만나 연기군의회부터 세종시의회에 이르는 '변화와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제2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정치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생업을 이어가며 공인이 아닌 사인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전 저의 정치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찾아주시곤 하시는데, 그럴 때만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Q. 세종시의회의 전신인 연기군의회 의원도 경험하셨는데, 세종시의회와 연기군의회 시절 의정활동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는지요?

연기군의회는 기초의회여서 주민 생활을 가장 밀접한 예산 심사와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 사무에 한정된 집행부에 대해 건제와 감시 역할에 충실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연기군의회 시절에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신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 특별법 제정 등 여러 변화를 준비해야 했기에 세종시민들과 함께 한 행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종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의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의회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함도 큽니다. 그에 비해 세종시의회는 기초와 광역 사무를 아우르는 단층제 구조입니다. 때문에 때로는 거시적이고 때로는 미시적인 안목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국가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들어 진행하는 광역 사무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회 출범 초기에는 그러한 업무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세종시가 있기까지 초대와 2대에 걸친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이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봅니다.

Q. 고준일 의장님께서는 조치원 청사에서 보람동 신청사 시대를 여셨는데, 그 당시 소회는 어떠셨고, 신청사 건립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치원 의회 청사는 연기군의회의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의 땀과 의지가 담겨 있기에 조치원 의회 청사에 대한 애착은 남다릅니다. 다만, 세종시 출범 이후 세종시 신청사와 함께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조치원 청사 시대를 미감해야 했습니다. 현재 보람동 신청사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보람동 신청사에는 집행부와 의회를 잇는 이동 통로가 있는데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독립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하지만, 세종시 발전과 세종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인 만큼 같은 목표를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둔 지금이 그러한 시기입니다. 세종시의회가 집행부와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 여론에 힘입어 세종시의 발전에 중요한 구심점이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Q.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세종시의회, 나아가 지방의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무엇보다 시민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어야 신뢰 받는 의회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야 합니다. 누군가 공익을 저해하거나 시민사회에 반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이 있다면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 사회에 평가 받는 과정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지역 여론을 청취하고 나아가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의지를 더욱 굳히 세워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주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는 소통과 화합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제3대 세종시의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세종시의회는 우리나라를 선도해야 할 세종시의 중요한 중심축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세종시 출범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강화의 상징도시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넓고 깊은 안목으로 의정활동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또한 세종시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의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겉으로 냉정해 보이지만,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한결 같이 잘해주길 바라는 응원과 격려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의 목표에 제3대 의회를 기점으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후반기)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6대 연기군의회 의원

민주통합당 민원실 부실장

민주당 충남도당 총무국장

지방의회가 자치분권 2.0시대의 주역 **‘새바람’ 일으킬 도약의 30년 준비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이태환

제3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연령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시도를 통해 타 시도보다 선도적인 세종시를 만들어 달라는 기대감이 표출된 결과다. 그 중 세종시의 원도심인 ‘조치원 토박이’로서 30대의 청년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이태환 의장이 변화와 쇄신의 중심에 섰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와 현재의 위상을 통해 미래 30년을 착실히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는 이태환 의장을 만났다.



Q. 지방의회 30주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 30주년은 많은 국민들이 함께 투쟁해 얻어낸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군부 독재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에도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1987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크게 발전을 거듭해온 ‘도약의 30년’이 이어져왔습니다. 2021년은 그 연장선에서 새로운 희망의 30주년을 준비하는 ‘첫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30주년을 맞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는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맞닿아 있는 대의 정치기관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주민들에게 의회 운영과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은 주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의회와 주민들 사이에 벽이 아닌 신뢰가 두텁게 쌓였을 때 지방의회에게 주어진 권한과 기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왔는지 되돌아보고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을 깊게 되새겨서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Q. 지방의회가 공히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세종시는 단순히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근본 목표가 아닙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서 국가 정책 방향에 맞게 조성되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주요 국정과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구호에만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 또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역시 이러한 민의를 적극 수렴해서 기초와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광역시도의회를 아우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향한 성원과 지지가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Q.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에 인사권 독립과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 배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다만, 지방의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의회에 예산 편성권과 조직 구성권 등이 부여돼 독립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주민자치권 강화와 국가적 지향점인 국민주권 즉, 지역 주민들이 자치에 직접 관여하는 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의회 운영상 많은 변화가 계획돼 있는 만큼 변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앞두고 혼선과 치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현)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후반기)

(전)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전)노무현재단(세종·대전·충남) 운영위원

(전)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대변인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고려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장

세종시의회 TIMES

역대 소식지에서 찾은 '의회를 빛낸 뉴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의정소식지인
<세종의회소식>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세종시의회 활동과 성과가 담긴
<세종의회소식>에서 세종시민들을 웃음 짓게 한
'의회를 빛낸 뉴스'들을 모아봤다.

‘역사적인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
전국 17번째 광역의회로 새롭게 출발



7월 1일 세종특별자치 출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7월 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하고 7월 6일 11시에 역사적인 개원식을 개최하였다. 개원식은 시장과 교육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의원선서, 개원사(의장), 축사(시장, 교육감), 축하메세지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기념촬영과 기념식수가 이어졌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호>

2012

2013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 개최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 유치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12년도 정기회가 지난 8월 23일 세종시 명소 중의 한 곳인 전동면 베어트리파크 수목원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7월 1일 전국 17번째의 광역자치단체로 새롭게 출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환준 의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시·도의회 의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행사는 유환준 의장의 환영사와 세종시장의 축사,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세종시 출범 이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된 최초의 전국단위 행사임에도 행사준비와 진행을 완벽히 지원함으로써 세종시의 위상을 전국에 알리는 큰 성과를 남겼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호>

2013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 분원 이전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성명서 채택 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에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정기회에서 채택된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설치 촉구」 성명서를 다시 채택한 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행정의 총주도시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이전·설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였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2호>

201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사회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이익을 공유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5월 28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를 통한 고도 성장으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소득불균형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중앙 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하였다. 결의안에서는 ▲사회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조속한 제정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사회적경제지방의원협의회 공동대표로 활동 중인 박영송 의원은 “극심한 사회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정착과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전국의 지방의회에 연대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4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 열린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균형의회, 연구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7월 15일 14시 본회의장에서 세종시의회 의원, 시장, 교육감,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대 세종시의회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원식은 개식, 국민의례, 의원선서, 윤형권 부의장의 의원 윤리강령 낭독, 개원사,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의 축사, 기념촬영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전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염원을 확인하였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현장중심의 의회, 견제와 협력이 조화된 균형의회, 끊임없이 노력하는 연구의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5호>

<세종의회소식 통권 8호>

THE PAST NEWS OF SEJONG CITY COUNCIL

2015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 결의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전)는 9월 22일 오전 11시 세종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인식), 충청북도의회(의장 이언구), 충청남도의회(의장 김기영)와 공동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 촉구'를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만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잠정 결정함에 따라 충청권 시·도의회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조속 이전'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충청권 4개 시도 의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정부는 중앙 행정기관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국민안전처와 인사 혁신처에 대해서만 이전을 잠정 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500만 충청민과 20만 세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정부는 「행복도시건설 특별법」에 따라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조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임상전 의장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제16조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서울에 진류할 6개 부처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신설 부처는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라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 해야 한다"며 "우리 충청인의 뜻을 결집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며, 향후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9호>

2016

**세종시의회,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고준일, 안찬영, 윤형권 의원과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가 진행되면서 사전 예측(0.316)보다 훨씬 높은 유발률(0.5~0.6)로 50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세종시의회와 관계전문가, 교육청,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군재조정으로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 원거리 통학생 서틀버스 운행을 확대, 공동학구 운영,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윤형권 부의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학교시설 확보를 통해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1호>

2016

세종시의회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7월 20일 10시 제3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준일 세종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全의원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는 행정기관의 단순한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유력한 대안이며, 향후에는 국회가 완전히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23만여 세종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

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중심 도시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국가 정책 공약으로 명문화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 한편, 이에 앞서 지난 6월 20일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의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지난 제20대 총선에서 여야 공약으로 국회 분원 설치가 발표된 바 있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2호>

2017

세종시의회, 2017년 제1기 청소년 모의 전자의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는 4월 27일 오후 14시에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종촌중학교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1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의회교실은 종촌중학교 손재혁 학생 등 40명이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동안 실시한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본회의 의사결정 과정과 풀뿌리 민주주의 운영방식 및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하여 역할 체험을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은 물론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의회의 기능 및 전자회의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의회의 진행방식에 맞춰 입교식, 기념촬영, 모의의회,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모의의회에서는 이규형 학생 등 10명의 3분 자유발언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안건 처리를 올초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으로 직접 체험하며 민주의식을 길렀다. 이 자리에서 고준일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또한 앞으로도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방문을 항상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최된 2017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 진로 및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며, 앞으로 본회의 방청 및 초·중·고 견학 프로그램, 시민의회교실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6호>

THE PAST NEWS OF SEJONG CITY COUNCIL

2018

제3대 세종시의회 개원식 개최...새 출발 알려
서금택 의장, “도약과 성숙을 향한 위대한 여정될 것”



제3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7월 2일 오전 10시 충령탑 참배 후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원식에는 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이춘희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관계 공무원과 가족·친지 등 약 50여 명이 자리했다.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와 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며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서금택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세종시의회는 민심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이라는 중차대한 과제가 남아있지만 지금처럼 모든 시민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헌정사 최초의 행정수도 탄생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시의회 청사 앞 정원에서 기념식수를 끝으로 공식 행사 일정을 마쳤다. 한편, 제3대 세종시의회는 개원식 이후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연수와 의원간담회, 제50회 임시회 개최 등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18호>

2020

지방의회 의정평가 ‘전국 3위’**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1인당 발언수와 입법활동 부문 3위 기록**
불출석 사유 기록 공개와 관리로 투명한 의회 운영도 주목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가 최근 발표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의회 정치를 성실히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 19개 전국 시민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3월 17일 발표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의회는 제3대 의회 출범 이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 광역시도의회 중 1인당 발언은 3.89건으로 3위, 1인당 입법활동은 3.50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전국 지방의회 243개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1인당 통계는 조사 기간 내 지방의회별 시정질문 및 5분발언 건수(발언 건수)와 조례 제·개정 및 폐지 건수(입법활동 건수)를 각각 합산한 후, 이를 의원 정수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총평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이라며 “조례 입법활동은 지방의회의 주요한 권한이며 5분발언이나 시정질의의 경우 시민들의 언로(言路)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방의회에서 발언 수가 적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세종시의회는 불출석 사유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지방의회에 포함되는 등 투명한 의회 운영과 전국 평균(4.3건)을 넘어선 건의·결의문 발표 수(7건)로도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는 제3대 세종시의회에 대한 대내외 신임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은 “제3대 의회 출범 당시 ‘일 잘하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결과가 통계치에 그대로 반영돼 보람을 느낀다”며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정활동의 의미를 되새겨서 앞으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5일 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25호>

2020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서 “최대 규모 이전” 주장 나와

**1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 토론회 참석자 국회 방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 “토론회서 나온 의견,
실제 추진안에 담겨지길 기대”**



세종시 주관으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낙연 의원과 이상민 의원, 홍성국 의원, 강준현 의원 등 지역구 의원은 물론, 중앙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노종용, 이윤희 부의장 등이 토론회에 참석해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국회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이낙연 의원은 축사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기업 지방 이전 등 세종 시가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토론회에서는 본회의장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국회세종의사당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크게 주목 받았다.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규모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일부 상임위원회 기능을 옮기겠다는 기준안보다 확장된 개념의 추진 방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경제효과가 7,550억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부가가치와 고용, 임금 유발 효과로 인해 지역에 7,550억원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보다 확장된 개념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안이 향후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26호>

2020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세종 이전’ 결정

**제6차 임시회서 세종시의회가 제안한
사무실 소재 이전 합의…
2022년 1월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 예정**



세종시의회는 11월 25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현재 서울에 위치한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사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사무실 임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도 1월에 서울 여의도에서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할 계획이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이로써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체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행정 수도 세종완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의회소식 통권 28호>

2021 상반기 활동 리포트

안정적인 회기 운영으로 효과적인 의정 활동에 주력

세종시의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제67회 및 제68회 임시회와 제69회 정례회 회기를 마쳤다. 세 차례 회기에서 각 소관 부서별 올해 업무추진 계획 논의와 시민 삶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비롯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활동 '활발'

입법 건수는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의정 활성화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세종시의회는 제67회와 제68회 두 차례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총 58건에 달하는 조례안을 제·개정했다. 이 기간 동안 처리된 조례안 중 76.3%의 비율을 차지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과 안전, 고용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전취

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심야야국 지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도시의 특성과 산업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차별화된 조례 제정 사례도 눈길을 끈다.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장려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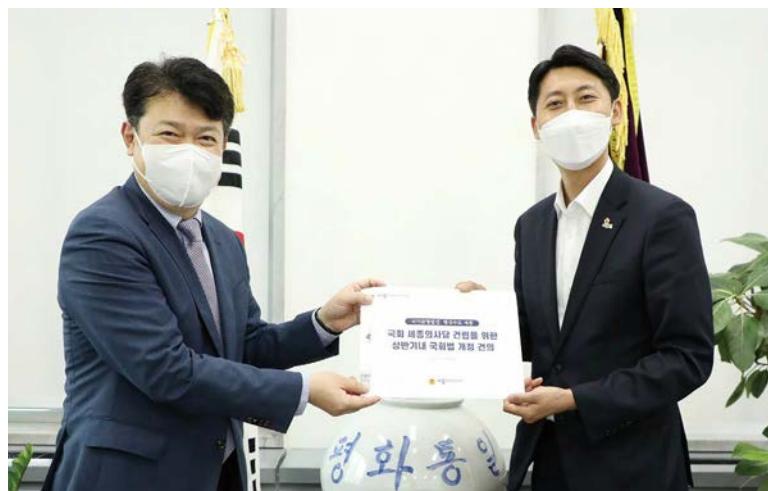


건의안과 결의안 통해 여론 조성 노력

세종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사회 변화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효를 앞두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조직 구성권과 세출 예산 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세종시의 숙원 사업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인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는 조속히 국회법을 개장해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목소리가 담겼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회와 시군자치구의회와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높은 수준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 도시 추진지지 결의안'과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결의안' 역시 지난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주목을 받았다.

행감 상시 시민제보 통해 시민 목소리 전달

세종시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앞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제보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했다. 지난해 15일간 이뤄졌던 제보 기간을 확대해 올해부터는 상시 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제보에 의한 요구사항이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6월 2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산업국 소관 행감에서 여민전 지급 대상 선정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비중 있게 다뤘다. 또한 산업건설 위원회 도시성장본부 소관 행감에서도 가득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문제와 관련된 시민 제보 사항을 소개하고 담당 부서에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행정복지위 행감에서도 역시 예산 낭비 사례와 관련된 시민 제보를 언급하면서 제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철저히 실태 조사 등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교육안전위 역시 행감 시민 제보로 접수된 '유치원 내부에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인 '드롭존''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번 행감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의회운영위 총 18건(주의 2건, 개선 5건, 권고 11), 행정복지위 총 205건(시정 5, 주의 15, 개선 56, 권고 129), 산업건설위 총 153건(시정 4, 주의 13, 개선 50, 권고 86), 교육안전위 총 109건(시정 13건, 주의 4건, 개선 37건, 권고 55건)에 달했다.



이태환 의장은 6월 18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만나 국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1회 추경 통과

제69회 정례회 안건 중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각각 2,455억원(13.5%) 증가한 총 2조 628억원과 1,352억원(16.5%) 증가한 9,560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 심사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4개 사업에서 17억 2,544만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개선 등 28개 사업에서 총 17억 2,544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7억 1,200만원(0.2%) 증가한 3,003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했다.

또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은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정책 홍보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8천 255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감염병예방 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서 총 3억 8천 255만원을 증액했으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조성액 보다 450여억원 증기한 1,775억 7,671만 원 규모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학교 방역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세종시의회 제69회 정례회 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6월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총 70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쳤다. 임위원회별 처리 안건을 살펴보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 규탄 결의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5건,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13건,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이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을 승인했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에서 "하루빨리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 완



충청권 시도의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성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7월 1일 세종시에서 전국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2일 의회 차원의 기념식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미래에 대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시의회 전 의원은 본회의 종료 직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행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한편, 이번 회기 중에는 특별한 성과도 있었다. 충청권 시도의회가 지난 6월 21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제5차 임시회에서 '상반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다. 이날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을 비롯해 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 등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 역사적 과제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손피켓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태환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이미 여야가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를 마친 사항"이라며 "지방소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 신설해야



서금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조치원읍)은 5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부서별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디원화 등 현실적인 문제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서 의원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조직이 부동산 관련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탈법행위 조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분석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쳤다.

5분 자유발언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를 활용한 시범사업 제안



손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현옥 의원(고운동)은 5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행공간 및 가로경관이 확보된 신도심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손 의원은 “현재 세종시 전면공지에 설치된 시설물 현황은 13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단위계획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8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로 인한 민원 발생과 행정력 낭비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언급된 전국 첫 옥외영업 사례인 인천 송도지구의 경우 수 차례 민·관의 논의를 거쳐 옥외영업으로 인한 미찰과 갈등을 해결해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관리해오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보행을 위한 유효폭 3m 이상 확보 후 나머지 전면공지에 대해 데크 등 일부 시설을 설치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를 위해 전면공지 내 식음도 가능토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정책 대안으로 ▲전면공지 개선방안 시범사업 실시 ▲시설물 가이드라인과 운영 및 관리 방안 마련 ▲상인과 주민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5분 자유발언

야생조류 건축물·투명방음벽 등 충돌 심각성 경고



이순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5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건축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언급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투명한 구조물에 의해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km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순열 의원은 환경부 지침에 근거한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을 위한 방법으로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로 교체 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조류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을 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세종시 차원에서 인공구조물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사항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건축물의 공공 디자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져 세종시가 조류충돌 저감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5분 자유발언

나눔 주차장 추가 설치로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하자



채평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면)은 5월 20일 제6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현재 읍면 지역 주민 한 명 당 자동차 등록 대수는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지역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세종시 모두에게 유리한 1석 3조의 사업인 나눔주차장을 추가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채 의원은 "주차장 이용자는 인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하고, 토지 소유주는 재산세 감면 혜택과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공용주차장 조성 예산을 최대 1/100 수준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나눔주차장 설치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 수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채 의원은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과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등 타 지자체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서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나눔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

전의 묘목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제안



박용희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용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의 묘목 산업의 6차 산업화를 적극 육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지역 산업으로서 여러 경쟁력을 갖춘 묘목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취소된 묘목 축제를 내실화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과 지원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타 지방자치단체 선도 사례들을 기초로 전의면 등 북부지역에 있는 산성유적, 고복자연공원, 베어트리파크 등 풍부한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묘목축제로 유입된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경수 묘목 공원 조성으로 지역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전의 묘목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함으로써 전의묘목단지가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국내 묘목 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묘목산업과 제조·가공업, 서비스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의면 묘목단지 개발을 기점으로 농림업의 6차 산업화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5분 자유발언

한글문화 중심도시 도약을 위해 한글날 행사 유치 등 힘써야



상병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현 의원(아름동)은 5월 3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세종, 한글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해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발언에서 상 의원은 우리 시가 지난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전국 광역자체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1천여 곳이 넘는 마을과 도로 등에 우리말 지명을 사용하는 등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의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언급했다.

한글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 대안으로 ▲한글날 행사 유치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민관이 함께 만드는 한글 지킴이 기구 설립 ▲한글도서관 설치 및 한글 특화거리 조성 등 한글 관련 콘텐츠 개발 ▲한글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한글문화·산업을 연계한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글날 행사 유치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한글날이 국경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까지 문체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글날 행사가 서울에서 진행돼 왔지만, 주관 부서의 세종 이전과 행정 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세종시 주관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는 주장이다.

또한 문체부 지정 전문기관으로 현재 전국 21곳에서 국비 지원을 받아 한글 관련 교육 및 문화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신규 지정이 이뤄질 경우 한글문화 중심지로서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5분 자유발언

청년 포털과 창업지원카드 등 도입해 청년 창업인구 유출 막아야



손인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손인수 의원(새롬·다정·나성동)은 5월 31일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청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에 나섰다.

손 의원은 “세종시 신도심 지역 평균 연령은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며 현재 청년 경제활동 인구수는 74,000명으로 청년의 72%에 해당하며 이는 세종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희망근무지역과 취업지역 간 일치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7.4%로 나타남에 따라 세종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손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지역 창업률은 전국 17개 사도 중 가장 높은 31%이며 청년 기업수도 최근 30개에서 18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세종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서울시 청년포털과 같은 체계적인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청년 창업을 통해 성장한 민간기업과 멘토링 사업 ▲청년창업지원카드 지급 ▲세종시 청년기업인증제 시행 등이 제시됐다.

5분 자유발언

시내버스 무료 승차 지원으로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하자



이재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은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버스 무료승차 지원 사업을 통해 교통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료 지하철 이용 등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달리 세종시의 노인 교통복지 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지하철 인프리를 갖추지 못한 제주도와 충청남도 등 여러 지방 자치단체에서 버스 무임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북 제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이 시의회를 통해 시내버스 무료승차 제도 도입 청원에 나서는 등 관련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현 의원은 “어르신 버스 무료 승차 지원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될 것이지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 기반 마련은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 방향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사고보험 지원대책 마련해야



차성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제6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차성호 의원에 따르면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주 이동 수단인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에 탑승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로 이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 주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적지 않아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동하다 교통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상품의 가입 기간 이제한돼 있는 데다 높은 보험료가 가입 희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북 전주시와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행 중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단체보험가입 지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연내 시행 예정인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사례를 근거로 세종시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교육과정 선택권 및 학생 인권 보장 위한 공간 조성 필요



박성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종촌동)은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 및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교실 및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에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경우 수업활용 공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식당 및 보건실 등 지원 시설물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어 학생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중·고교 통합 운영학교가 세종 미래교육의 '시험무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에 필요한 개선사항을 현장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학생 중심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추진 ▲중·고교 통합 운영에 따른 공동 시설물 이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보건실 분리 설치를 통한 학생 인권보장 등을 해결방안으로 거론했다.

5분 자유발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도입으로 도덕성 및 전문성 검증해야



상병현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현 의원(아름동)은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인사청문 제도 채택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이를 외면하고 있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산하기관장이 새롭게 임명될 때마다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의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방만한 조직 운영과 부실 경영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및 기관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3년 전 ‘인재풀의 부족과 산하기관의 설립 초기 안정을 위해 인사청문회 실시는 시기상조라고 입장을 밝힌 이 시장의 소극적인 자세를 상기하며 조속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해 ▲시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를 포함한 인사청문 제도 협의회를 구성해 대상기관의 범위와 제도의 운용방식 논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인사 청문제도 설치 근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5분 자유발언

어버이날 세종시화인 복숭아꽃 달기 운동 제안



안찬영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한솔동)은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 인점에 착안해 세종시 차원에서 ‘어버이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자고 제언했다.

안찬영 의원은 “우리 역사에서 부모님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며 효심을 전했던 상징물이 있었다”며 “조선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흥씨에게 3천 송이에 달하는 복숭아꽃을 바쳤던 기록이 남아있다”고 소개했다.

이 역사에 근거해 세종시화가 복숭아꽃인 만큼 조치원의 특산 물인 복숭아와 연계해 매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을 실시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복숭아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우리 전통에 맞는 기념일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러한 세종시 차원의 문화운동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역사와 지역성을 정립하고 나아가 전통을 살리는 기념일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안 의원은 “우리 문화와 역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어버이날 ‘복숭아꽃 달기 운동’이 세종시 나아가 우리나라만의 뜻깊고 소중한 문화로 퍼져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비해 촘촘한 교통대책 수립해야



임채성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6월 23일 열린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채성 의원은 “앞으로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및 광역도로가 완료되고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되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세종시의 주요 교통 결절 지점 별로 출퇴근 시간대마다 심각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세종의사당 건립 이후 가중될 교통난을 덜기에는 한 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 ▲구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6 호선 폐지 전면 재검토 ▲국지도 96호선과 시청대로를 연결하는 교량 추가 설치 ▲광역도로 및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적기 구축을 언급했다.

5분 자유발언

고복자연공원 상습 주차난 해결해야



차성호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고복자연공원 상습 주차난’ 해결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3단계에 걸쳐 약 200억원을 투자한 고복자연공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은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차 의원은 “실제로 고복자연공원 면적의 약 1/3 규모인 세종중앙공원의 경우 총 800대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1/6 규모에 불과한 세종호수공원에는 총 1,216대 주차가 가능한 것에 비해 고복자연공원에는 총 302대만 주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고복자연공원 일대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근 하천부지 등 국유지의 적극적인 발굴 ▲국유지 발굴에도 주차 공간 부족 시 인근 사유지 매입 또는 임대 검토 ▲성수기나 주말에 이용 가능한 임시 주차장 마련 ▲고복생태공원 내 순환 서틀버스 운행 등이다.

차 의원은 “고복자연공원이 언제든지 시민과 방문객들을 넉넉히 품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차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긴급현안질문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시설 설치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철규 의원(보람·대평동)은 6월 23일 제6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실제 수요와 시민 편의를 고려해 규정과 필요에 적합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금강보행교 북측 임시 주차장 조성 계획상 예상되는 문제점과 3·4생활권 수변공원 주차장 확장과 상가 미분양 공터 활용 등을 통해 필요한 수요에 맞는 공원계획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행복청과 LH세종본부로부터 인수 예정 인도로 지하시설 인식표지 및 건물주차장 진입구간 보도블록, 고원식 횡단보도 등이 규정 또는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돼 있는 경우 시 차원의 대응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한 행복청이 저류지에 설치한 운동시설의 문제점과 저류지 관리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글벗초교 앞 문화공원 내 인라인스케이트장과 길거리 농구장을 비추



유철규 의원

는 조명탑이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게 높게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사용빈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과하게 설치된 사유를 집중 추궁했다.

관내 저류지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4-1 및 4-2 생활권 저류지 경사면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져 미관을 해치고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최적의 관리를 위해 저류지 전체 바닥면적에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유 의원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 비율이 10% 이하인 점을 고려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설문은 적절하지 않다”며 “향후 행복청과 LH세종본부 등이 정규 규격에 맞게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鄙지지 않도록 시 차원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시청 및 교육청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현옥, 이하 예결특위)는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 '2020회계연도 세종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기준 전년 대비 10.9% 증가한 2조 633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조 2,156억원, 세출 결산액은 1조 6,818억원이다. 교육청 결산 규모는 전년 대비 35.9% 감소한 9,391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9,418억원, 세출 결산액은 9,016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집행 잔액 발생 원인과 문제점 보완, 성과관리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했던 성과보고서 작성,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시비 미편성으로 인한 국비 보조 최소화,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해 집행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면밀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과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의 이월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회 요청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에 읍면과 동 지역 간 교육인프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운용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심사했다"면서 "회의 중 지적사항들이 시청과 교육청 올해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돼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3대 제3기 세종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해 7월 구성 이후 시청과 교육청 예산안 및 결산 안 총 17개 안건을 심사했으며, 6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 등 추경안 심사

5월 20일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통해 의원 국외여비 5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고통을 분담하지는 취지에서 국외 여비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세종시의회의 청렴 대책과 관련한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수당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 행사 등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제1차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67억 2천만 원으로 편성됐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의회사무처의 올해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시정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원식 위원장은 오는 7월 지방의회 30주년 기념행사를 철저히 준비해 줄 것과 내년 1월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전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의안등록에서 심의까지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한 의안처리시스템 구축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노종용 부위원장은 시의회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의회 포상 조례를 현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원 의정활동 보도가 적기 예에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에게 제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손인수 위원은 시의회 현장 의정활동 운영계획은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언급하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손 위원은 총청권시도 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분원 설치 촉구 등 총청권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희 위원은 시의회에서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조례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통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 모니터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시했다.

차성호 위원은 올해 첫 도입한 상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운영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가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의원정책 개발비로 인해 연구모임에서 충실히 연구용역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구모임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원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 개선해서 한층 발전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종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 심사

제69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데 이어, 자체계획 수립 시 관련 조례 준수 등 18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윤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의장을 제외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했다.



김원식 위원장



노종용 부위원장



손인수 위원



이윤희 위원



차성호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5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5억 6,835만 8천 원(5.74%) 증액한 4,893억 5,195만 4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을 거쳐 6억 9,370만원 (0.14%) 감액한 4,886억 5,825만 4천원으로 수정 가결됐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에서 10억 8,52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21 대한민국 숙박 산업 대전’ 등 7개 사업에서 3억 9,150만원을 신설했다. 이날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 등 6개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6월 1일 세종시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시청자미디어센터, 세종예술의전당 순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조치원에 위치한 세종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지원과 운영 프로그램, 교육 현황에 대한 설명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한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끝으로 나성동 세종예술의전당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운영시설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등 본청·직속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춤총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현재 2.5억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우리 시 전통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 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 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지역확대 사업에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행정 처리 미흡으로 시민 불신을 초래했다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차성호 부위원장은 예산의 변경과 전용의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어 예산편성의 사전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고유의 예산 심의 의결권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건소 소관 예산 불용에 대해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도 비대면 겸기활성화 사업과 모바일 헬스케어 등 비대면과 대면 사업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세 위원은 보건소 진료서비스 만족도에 대해 보건소가 시민 건강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희 위원은 이월 체납액 중 치량과 관련한 과태료가 많은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차장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현 위원은 예산 불용액은 추경을 통해 정리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



노종용 위원



이영세 위원



이윤희 위원



이재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

5월 21일과 24일 양일간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동의안 등 6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조정액 반영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 등 각종 현안사업을 위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2021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77억 6,85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29억 7,374만원(28%) 증액 편성되었으며, 계수조정을 거쳐 총 예산액 변동 없이 일부 사업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했다. ‘청소년차량 주차장 포장공사’ 등 5개 사업에서 6억 6,3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노후 도로포장면 정비’ 등 5개 사업에서 6억 6,300만원을 증액 및 신설했다. 또한 제1회 추경 예산안 반영에 따른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실시

6월 1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부강 버스승차장 3개소, 공동구, 도담동 버스정류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5개소를 방문해 점검했다.

서금택 위원은 조치원역 택시승강장 개선과 관련해 택시기사 및 시민 의견 등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을 통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채평석 위원은 부강 버스승차장과 관련해 횡단보도에 인접해 설치된 부강 버스정류장으로 인해 2대 이상 버스 정차 시 횡단보도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버스정류장 이설과 함께 비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

손현옥 위원은 도담동 도램마을 8·10단지 버스정류장 이설과 관련해 주민 및 상가 소유자 등 상대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꼼꼼히 검토해 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상병현 위원은 지하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동면 한누리대로에 있는 관리사무소를 찾아 행정중심복합도시 전 구간(3구간)에 있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해 문화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만큼 곧 있을 공연 등에 대비해 준비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설물 하자 등 2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임채성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상병현 위원



서금택 위원



손현옥 위원



채평석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2일부터 8일까지 경제산업국과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등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여민전 운영과 관련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 신속 조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법정 계획 수립과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요청했다.

상병현 위원은 남자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를 확대 설치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사 기준을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금택 위원은 조치원 문화정원의 실효성 있는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손현옥 위원**은 1·2호점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속한 하자 보수를 요구했다.

채평석 위원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 구간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3개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예산결산 예비심사에서 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이월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예산 성과보고서상 성과지표 측정산식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식 부위원장은 예산 성과지표 달성을 따라 예산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관련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업무 추진을 요구했다.

상병현 위원은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 등 대규모 국비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향후 국책 사업의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금택 위원은 긴급성을 요하는 국비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시비 확보가 늦어 이월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국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현옥 위원은 예산의 성과목표가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돼 사업 계획이 수립된 부분을 지적하고 2022년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위원은 당초 회계연도 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사업을 사고 이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고 이월을 최소화하면서 당해 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안전위원회

1차 추경 심사…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예방 등 예산 증액 중점 논의

5월 21일과 24일 양일간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5월 2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58억 2,737만 3천원 증액한 1,590억 2,074만 4천원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 분야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자전거 도로 및 각종 시설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취약지역 등에 대한 초기 진압환경 구축으로 화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5월 24일에는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1,352억 1,498만 4천원 증액한 9,560억 1,334만 4천원을 편성했다. 계수 조정 결과 교원인건비·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등 12개 사업에서 2억 2,055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세세하지 않은 사업설명서로 인해 더욱 중요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사업설명서에 기본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들을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6월 1일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해밀중·고등학교, 세종 누리학교, 장군119안전센터, 용수천 제방도로 순으로 4개소를 방문했다. 첫 일정으로 해밀중·고등학교를 찾아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학사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실 및 상담실, 단위학교 학생공감 상담프로그램인 위클래스 등 학교 통합운영시설을 둘러본 뒤 운영지침 등 기준 마련을 통해 비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줄여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세종누리학교에서는 올해 본예산을 통해 설치된 비기림 차양막을 확인하고 전공과 학생들의 수업을 참관했다. 교육안전위 위원들은 장애 학생들의 자립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장군119안전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임시청사 및 2022년 8월 준공 예정인 신청사 재건축 부지와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금남면 용수천 제방도로 공사현장에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 및 숲뜰근린공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숲뜰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진출입 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성수 위원장



손인수 부위원장



박용희 위원



안찬영 위원



이순열 위원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난 6월 2일과 4일, 7일 3일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6월 2일 소통담당관 등 5개 부서와 4일 유초등 교육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2개 직속기관, 7일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와 평생교육학습관 등 2개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됐다.

박성수 위원장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청소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예방 연구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며,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손인수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계획 마련 및 위원회 구성 등이 실제 운영과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관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은 “2018년 이후 조례에 의해 시행규칙이 수립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파악해 이를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인찬영 위원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과 불용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처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순열 위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들이 교육청사에서 담당 부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산결산 심사서 교육청 과다한 예산 변경 사용 지적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6월 10일 세종시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미추진 기타 사업 감액을 통해 학교운영비 예산 절감과 신속하고 선제적인 학교 방역 환경 관리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성격과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예산 변경의 남용 방지 ▲이월액 등을 줄이기 위한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교육청의 중점 과제와 핵심 사업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성과보고서 작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청 자체 성인지 사업 발굴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어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전의면 북암천 차량통제 및 침수알림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119닥터카’ 운영 등을 통해 시민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태료 및 하천사용료 수입 등이 미수납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채권 확보 노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유의미한 지표 발굴 등 성과지표 개선대책 마련 필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추진 구현 등을 지적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행복청의 ‘개별 대학부지→ 주택용지 전환’ 발표에 우려 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위원장 상병현, 이하 ‘대학유치 특위’)는 4월 29일 국토부와 행복청의 ‘행복도시내 1만 3000호 공급 예정 발표’와 관련해, 세종시민들과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대학부지의 주택용지 전환은 대학유치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대학특위는 행복청의 주택공급 발표 내용 중, 행복도시 4-2생활권 내 개별(단독) 캠퍼스 부지(4-1, 4-6, 85.6만㎡)를 주거 용지로 전환하여 4천 9백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발표에 따라 대학부지 내 4천 9백호 이외에 4-2생활권에 1천 4백호의 주택이 추가 공급될 경우,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 여건을 볼 때 학교 신설 부지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어 이는 결국 대학 유치에 필요한 부지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내놓았다.

이에 대학유치 특위는 “결국 국토부와 행복청의 대학 부지를 줄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사실상 세종시에 개별대학 신설 및 유치를 가로막는 것이며, 세종테크노밸리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자족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는 세종시의 성장 동력을 잃게 해 기업 유치에도 난항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세종시가 기존 4생활권 4-3 구역에 계획되었던 대학 부지에 당초 네이버가 요구한 면적(10만㎡)의 3배에 달하는 29.4만㎡의 면적을 네이버센터로 매각함에 따라 당초 대학 예정부지 4-3 구역 전체가 사라졌으며, 이때에도 시민들과의 어떠한 공감대 형성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학캠퍼스 유치 특별위원회는 상병현 위원장, 차성호 부위원장과 노종용, 박성수, 서금택, 안찬영, 이윤희 의원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특위 2차 현장점검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제4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성, 이하 공공특위)는 4월 28일 2차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공공특위 위원,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행복청, LH 및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2차 점검은 세종예술의전당, 무궁화공원 등 2개소로 코로나19 예방 및 원활한 점검을 위해 2개조로 나눠 진행했다.

공공특위 위원들은 현장에서 행복청 및 LH 관계자로부터 아트센터(세종예술의전당)와 무궁화공원 등 시설물 현황을 보고받은 후 문화공원으로서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기 위한 꼼꼼한 시설점검이 이뤄졌다.

지난 1차 점검 때 나온 124건의 지적사항 중 85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39건은 오는 6월말까지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공공특위는 이번 2차 점검 결과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복청 등 관계 기관 및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행복청 및 LH로부터 해당 공공 시설물을 최종 인수할 방침이다.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활동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국회 앞 1인 시위

지난 6월 18일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에 이어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가 국회법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이하 행수특위)'는 6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이날 1인 릴레이 시위는 국회법 개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역 여론을 수렴해 특위 차원에서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수특위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지난 해 설계비 147억 원을 확보했지만, 여야의 미온적인 태도로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 법 개정안 3건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예산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행수특위는 국회법 개정을 상반기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세종의사당 이슈가 자칫 대선용으로 전락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행정의 비효율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인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더 이상 국회법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국회법 개정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열망도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SNS 인증샷 캠페인을 이어 가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연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철규 위원장은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이영세 대표의원



3차 간담회 개최

4월 20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종시 여성 안전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는 세종시 안전도시위원회 송두범 위원장이 발표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5개 분야 중 ‘여성이 안전한 세종’ 분야 ‘세종시 여성 안전현황 및 과제’를 청취하고, 이영세 대표의원 주재로 회원들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두범 위원장은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안전 정책에 대해 기존의 공간·환경적 개선도 필요하지만 성인지 관점에 근거한 여성안전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세종시 여성안전 정책 기조의 설정과 여성안전 정책 수요 분석 및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여성 주도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세종시 여성안전에 대한 주체적인 정책 발굴의 필요성과 시민들의 성인지 및 성 평등 인식 개선·확산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활성화 및 실질적 운영 등 세종시 여성안전 정책의 다양한 사례들과 연구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



5월 18일 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세종시 초등 마을 돌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는 타 지자체에 비해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돋기 위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마을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요 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의 과업 범위로 ▲학부모 대상 초등돌봄 수요 조사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지원 정책 개발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의 기대 효과 등을 포함시켜 세종시의 초등돌봄 공백 현황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영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적 돌봄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공적 돌봄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기능을 마을돌봄 모델로 제시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주민 참여형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서금택 대표의원



3차 간담회 개최

4월 3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업체 선정과 연구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연구 과제로 ▲시 재정 여건 분석 ▲보통교부세 현황 분석 및 진단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용역 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등을 확정했다.

또한 현 지방교부세 산정제도에 보다 실질적인 자치단체 재정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단기적 대응·진단 외에도 중·장기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서 우리 시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시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서금택 대표의원, 상병현 의원, 이재현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 등 7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 착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세종시에서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주도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이 4개월간 진행된다. 5월 1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인구 규모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공공시설물 인수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여건과 보통교부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을 분석 및 진단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이순열 대표의원



세종시민이 직접 자전거도로 안전 점검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이순열 의원)'이 3월 27일 오후 2시 세종호수공원 수상무대에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 출정식을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출정식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주최하고,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세종YMCA·대전세종연구원 도시안전연구센터가 주관해 열렸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6생활권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세종시민 20명으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은 오는 9월 18일까지 매월 1회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관점에서 직접 구획별 자전거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3차 간담회 개최

4월 27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재영 선임연구위원이 '정치언어로서의 자전거'를 주제로 해외의 자전거 정책들이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치인 및 기관장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구모임은 일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현황 분석과 공공자전거 이용률 제고 방안 등을 토대로 정책 방향 제시와 조례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적인 과업에 대해서는 추후 간담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시청과 연구용역 공동 진행



5월 1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세종시청과 공동계약 방식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안용준 도시안전연구센터장의 '공공자전거 어울림 이용 형태로 본 세종시 자전거 활성화 방

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집행부와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위한 연구용역 방법 및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임채성 대표의원



2차 간담회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과 세부 연구 용역 과제 논의

4월 22일 오후 2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사업 주체별로 제각각이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통일된 표준안을 마련하고, 목원대 박선규 교수가 발제한 ‘세종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방향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의 세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세종시의 급격한 토지 가격 상승과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등으로 인해 비법정도로 분쟁과 관련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문제 인식을 비탕으로 정책 대안과 관련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한 해결 방안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도로 지정 대상 확대 ▲성장관리방안 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확보 ▲비법정도로의 도로 지정 및 통행제한 억제 방안 지속 강구의 필요성 등이다.

연구모임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세종시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과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사례 등 조사분석’, 개선방안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임채성 대표의원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사용되는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내 지장물 설치 등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법정도로 분쟁 현황 조사 및 제도적·운영적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비법정도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의(제출)자	위원회 심사결과
1	2768	긴급현안질문	유철규의원 외 5명	- -
2	27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식의원 외 5명	운영위 원안가결
3	276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 원안가결
4	276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회운영 위원장	운영위 원안가결
5	2769	일본의 빅토리아 유엔기구 규탄 결의안	이순열의원 외 17명	운영위 원안가결
6	276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 원안가결
7	27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 -
8	276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 -
9	2722	세종특별자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재현의원 외 5명	행복위 수정가결
10	2723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세의원 외 10명	행복위 원안가결
11	2724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음부조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철규의원 외 6명	행복위 원안가결
12	2725	세종특별자치시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순열의원 외 9명	행복위 수정가결
13	2726	세종특별자치시 지자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종용의원 외 5명	행복위 원안가결
14	2727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현의원 외 5명	행복위 원안가결
15	2728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금택의원 외 8명	행복위 원안가결
16	2729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노종용의원 외 5명	행복위 원안가결
17	2730	세종특별자치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성호의원 외 6명	행복위 원안가결
18	2731	세종특별자치시 대학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병현의원 외 9명	행복위 수정가결
19	2732	세종특별자치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현의원 외 5명	행복위 원안가결
20	2733	세종특별자치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지원 조례안	박용희의원 외 6명	행복위 수정가결
21	2734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출금 방지 지원 조례안	노종용의원 외 5명	행복위 원안가결
22	273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호의원 외 4명	행복위 원안가결
23	2685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4	268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리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5	2687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6	2692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7	2693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8	2694	세종특별자치시 제육진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29	2697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30	275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31	2759	세종특별자치시 시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행복위 원안가결
32	276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복지위원장	행복위 원안가결
33	2736	세종특별자치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채성의원 외 7명	산건위 원안가결
34	273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성의원 외 8명	산건위 원안가결
34	2737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성의원 외 8명	산건위 원안가결

연번	의안번호	안 건 명	발의(제출)자	위원회 심사결과
35	2738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	차성호의원 외 4명	산건위 원안가결
36	2739	세종특별자치시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안	손현옥의원 외 6명	산건위 원안가결
37	2740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현옥의원 외 6명	산건위 원안가결
38	2741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금택의원 외 8명	산건위 원안가결
39	274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현옥의원 외 9명	산건위 원안가결
40	274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성의원 외 8명	산건위 수정가결
41	2744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채평석의원 외 6명	산건위 수정가결
42	274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식의원 외 5명	산건위 원안가결
43	274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병현의원 외 4명	산건위 수정가결
44	274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열의원 외 9명	산건위 원안가결
45	2748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상병현의원 외 4명	산건위 원안가결
46	2749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채평석의원 외 6명	산건위 원안가결
47	2703	세종특별자치시 순환물자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건위 원안가결
48	2706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시장	산건위 수정가결
49	2707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건위 원안가결
50	2708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산건위 원안가결
51	276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건설기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원안가결
52	229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수의원 외 5명	교안위 수정가결
53	2750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박성수의원 외 8명	교안위 원안가결
54	275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박용희의원 외 6명	교안위 수정가결
55	275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절에 관한 조례안	손인수의원 외 7명	교안위 원안가결
56	2753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손인수의원 외 7명	교안위 원안가결
57	275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순열의원 외 9명	교안위 수정가결
58	2709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간 철전 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시장	교안위 원안가결
59	2710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교안위 원안가결
60	2711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 시설공사 분리기준 일부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교안위 원안가결
61	2717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안위 원안가결
62	271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안위 원안가결
63	27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교안위 원안가결
64	276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학교안전위원회 소관)	교육감	교안위 원안가결
65	2688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결위 원안가결
66	2689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예결위 원안가결
67	2690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예결위 원안가결
68	2714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결위 원안가결
69	2715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감	예결위 원안가결
70	2716	2020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교육감	예결위 원안가결

한 걸음 더 세종 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딥택트 여행지

한바탕 자연과 교감하는

국립세종수목원·고복자연공원·베어트리파크·황토메타길



도심 속 20개 테마정원 '국립세종수목원'

한여름 열기만큼이나 요즘 가장 '핫'한 곳입니다.
온라인 사전예약을 받는 사계절전시온실은 매주 잔여 표 구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요. 사계절전시온실의 특별전시관은
자연 정원에 판타지한 상상력을 더한 공간 연출로
방문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0개의 주제별 전시원과 국내 최대 식물 온실 등을
갖췄는데요. 가장 먼저 봄꽃 잎을 형상화한 사계절 온실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열대·지중해 식물관, 특별 전시관 등 3개 전시관으로 구성,
세계 각국의 진귀한 식물을 만납니다.
주제별 전시원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누각을 실물과
같은 크기로 재현한 한국 전통 정원, 속리산 정이품송과
뉴턴의 사과나무 후계목을 보존하는 후계목 정원 등이 있고요.
텃밭 식물을 옮겨 놓은 생활정원에서는 관람객이 파종과 재배, 수확까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 정원, 습지원, 야생화원 등이
축구장 90배의 면적(65ha)에 펼쳐지는데요.
계절마다 한 번씩은 와봐야 수목원의 진가를 알 수 있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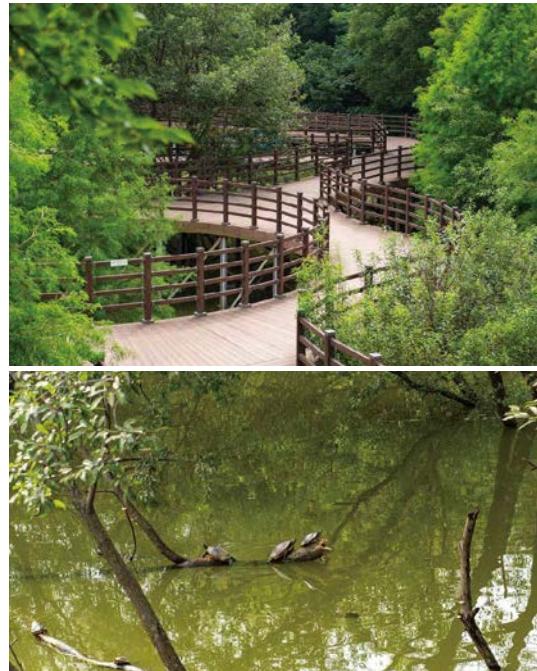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수목원로 136 국립세종수목원
🌐 www.sjna.or.kr
📞 044-251-0001

푸른 물길 따라 한 바퀴 ‘고복자연공원’

고복자연공원의 봄날이 벚꽃길이라면, 여름은 푸른 물길입니다.
5km의 수변도로를 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뿐해집니다.
고복저수지는 연서면의 명산 오봉산이 협곡을 이루는 곳에
둑을 쌓아 만들었는데요. 저수지를 중심으로 1km의 수변데크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산자락이 휙감는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변화무쌍한 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데크길 위로 몸을 늦힌 수생식물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물 위를 노리는 오리와 남생이를 문뜩 만나기도 합니다.
물속에는 봉어, 잉어, 메기 등 토속 어종이 서식하고 있죠.
공원 주변으로는 오래된 토속음식점이 즐비해 외식을 겸한 나들이객이
유독 많은데요. 명소로 꼽히는 곳들도 놓칠 수 없죠.
야외조각공원, 민락정, 연기대첩공원까지 발자국을 찍었다면
고복자연공원을 제대로 즐긴 겁니다. 저수지 북쪽 언덕배기에 자리한
전통누각 민락정에 올라 산과 물을 한눈에 담고,
잔디광장이 조성된 연기대첩공원에서 피크닉을 해도 좋을 듯합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도신고복로 586 고복자연공원



동물원 옆 수목원 '베어트리파크'

“제 일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이 씨 뿌리고 가꾼 일이 아닌가 합니다.”

베어트리파크 설립자인 송파 이재연 선생의 말입니다.

50년 동안 비밀스럽게 가꿔온 정원이 2009년 시민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한 그루씩 심었던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만들고 한두 마리 놓아 기르던 반달곰, 비단잉어가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동물원과 수목원'입니다.

베어트리파크는 모두 19개의 테마정원으로 조성했는데요.

백여 마리의 반달곰과 40여만 그루의 초목류가 33만㎡ 부지에 조화롭게 배치돼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원부터 유럽풍의 정원, 열대식물원,

수련원 등이 서로 다른 매력을 뽐어냅니다. 특히 베어트리파크 곳곳에서 관람객을 반기는 곰은 이 수목원의 트레이드 마크이죠.

쳇바퀴를 돌고 애교를 부리는 곰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납니다.

반달곰 외에도 비단잉어가 노니는 연못, 사슴 동산, 애완동물원 등이 있는데요. 관람객이 직접 먹이를 주면서 동물과 사귀는 특별한 시간도 준비돼 있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신송로 217 베어트리파크

🌐 beartreepark.com

📞 044-866-7766



금강자연휴양림이 품은 보석 '황토메타길'

금강자연휴양림이 품고 있는 보석 같은 길입니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숲속 황톳길과 볼거리가 어우러진 산책코스인데요. 세종시 '걷기 좋은 길'로 꼽히기도 했죠. 휴양림 매표소(주차장)에서 시작해 유실수원-창연정-황토메타길-조류마을-무궁화동산-동물마을-구름다리-매표소에 이르는 순환코스는 3.5km 남짓으로 1시간 걷기 코스로 안성맞춤입니다. 유실수원을 지나 만나는 갈림길에서 왼쪽 길로 접어들면 창연정까지 평坦한 숲길이 600m 정도 이어집니다.

창연정 정자에 올라 비단결같이 흐르는 금강을 감상하고, 10분 정도 더 발걸음을 옮기면 황토메타길(450m)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닿을 듯 쭉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를 이뤄 한여름 산책에도 부담이 없죠. 산책로의 양 끝에는 발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돼 있으니 수건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조류마을과 동물마을, 산림박물관 등을 차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공작, 오리, 독수리 등의 조류와 원숭이, 꽃사슴, 염소 등의 동물이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라면 꼭 들려봐야겠죠?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산림박물관

🌐 keumkang.chungnam.go.kr

📞 041-635-7400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쇄신 노력 긍정적



30년이 된 지방의회는 뜻을 세우는 나이 입지(立志)에 걸맞게 시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혁신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출범 이후 2대 의회부터 젊은 도시와 청년에 걸맞게 ‘젊은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출해왔다. 제2대 고준일 의장과 현 이태환 의장이 대표적이다.

이는 세종시의회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변화 요구와 혁신의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한층 젊은 연령으로 이뤄진 원 구성답게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눈높이도 사실 예전보다 높아졌다. 그만큼 시민들에게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변화와 혁신 의지가 중요한 시기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으로 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욱 낮은 자세로 의원 스스로 역량과 청렴을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변화와 혁신을 꾀하여야 한다.

시민과의 소통도 지방의회의 지상 과제다. 그런 관점에서 세종시의회는 정례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 소통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매 회기 전 정례 언론브리핑을 진행함으로써 회기별 주요 안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넓히는 데 주력해왔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불편사항 등을 전달받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여러 제약이 발생해 일부 제한된 느낌도 없지 않지만 그간 역대 의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정례 브리핑을 시도한 점은 시민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 역시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문제다. 지역 언론인으로서 의정 현장을 직접 취재하면서 세종시 의회 의원들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다.

매 행정사무감사마다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시정 개선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정책 대안을 모색하려는 행보 역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상이라고 본다.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전국 지방의회가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배치 등으로 의회 운영에 큰 변곡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회의 편의과 권리 신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의회에 보다 관심과 열의를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역시 고민해주길 바란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위한 대의기관이다.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가 정의를 바로세우는 민의의 전당이라는 점을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세종시의회가 변화와 혁신의 중심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지방분권의 선도도시인 세종시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이 하나둘씩 이뤄지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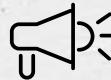
지방의회 30주년을 맞아 더욱 발전하는 세종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취재본부장 겸 이사)

KEY NEWS

언론에 비친 주요 의정활동



중도일보

세종시의회 2020회계 결산 종료

세종시의회가 지난 2월부터 20일간 실시한 '2020회계연도 결산감사'를 종료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통합결산 결과 세입은 총 215만억원, 세출은 1조 681억원이다. 순 세계 임금은 전년 대비 1330억 증가해 40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합리화 ▲예산 확장과 집행의 일관성 등이 강조됐다.

세종시의회는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재무운영의 합당성 ▲개년의 오류와 실제 수지 부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통합결산 결과 세입은 총 215만억원, 세출은 1조 681억원이다. 순 세계 임금은 전년 대비 1330억 증가해 408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감사에서는 ▲예산 집행의 합리화 ▲예산 확장과 집행의 일관성 등이 강조됐다.

2021년 04월 22일
08면 (정체)

여건을 보다 나이지게 만들어 달라는 다양한 요구와 수요가 달려 있다"라며 "시민과의 약속이기도 한 예산집행이 목적이 및게 적시 적소에 잘 쓰였음을 충족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20일부터 개최되는 제69회 제1차 정기회 기간 중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주요 안건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작=고려선 기자 misunyda@ (11.5x6.4cm)

▲ 2021.04.22_ 정치 04면 [중도일보]

忠清日報

세종시의회, 민원 오픈수
해당 방송 결정 청회 측구

세종시의회는 민원처리에서 일부 경우 후원부처를 찾은 오장수 해당 방송 결과 공개해 국민에게 오픈수 방송 결과를 알리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민원 처리에서 일부 경우 후원부처를 찾은 오장수 해당 방송 결과 공개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세종시의회는 민원 처리에서 일부 경우 후원부처를 찾은 오장수 해당 방송 결과 공개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세종시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방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대하는 2021년 4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청회 측구 주제.

세종시의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방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대하는 2021년 4월 15일 오후 3시 30분에 개최된 청회 측구 주제.

▲ 2021.04.26_ 종합 03면 [충청일보]

충청타임즈

행정수도 걸맞는 대학캠퍼스 유치 '시동'

세종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4·2 생활권 대학 부지 전략 수립

세종시는 2일 시청 집현실에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 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수도에 걸맞는 대학 유치를 위한 전략을 짜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상호 세종시 경제부시장, 세종시의회 대학캠퍼스 유치특별위원회, LII, 대전세종연구원, 시민주권회의 문화체육과 위원, 관계부서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4·2 생활권 대학 부지에 대한 시 차원 대학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계획 마련을 목표로 오는 9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스대학 유치 대내외 환경·여건 분석·신학연 연계 등 특성 대학 조성 방안 스럽게 국·공립대 대학 유치 전략 등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활용해 시 특수성을 살린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대학유치 실행력을 높이기 한편, 교육부, 행정부 등 관계 기관과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상호 부시장은 "공동캠퍼스의 기 선정 대학(6곳) 입주와 같은 부지 입주대학 분양이 상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간 개최"라고 말했다.

/세종 홍순정기자

(11.2x10.3cm)

▲ 2021.04.05_ 종합 16면 [충청타임즈]

忠清日報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진 만장일치 가결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공식 인건으로 제출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진'과 '전국시도의회 수당 견의안'이 지난 16일 예통금례대주 호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3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6차 임시회에서 의장협의회 사무실 세종 이진을 협의한 데 이어, 이번 임시회를 통해 해답 사안을 공식 인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 있는 의장협의회

회 사무실의 세종 이진은 공식화됐고, 실무적 차원에서 시무실 위치 및 이전 방법 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지난 2년간 능동태웠던 신사시무원 수당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신사시무원 및 투쟁대상자에게 수당의 현실화에 대해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세종과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관여현대도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등 총 17개 인건을 수렴하고, 이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제주도 행정부도 민족을 전달했다.

/원형일기자

(11.8x8.8cm)

▲ 2021.04.19_ 종합 02면 [충청일보]

忠南日報

2021년 04월 29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 청렴아카데미 개최

세종시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청렴의식 확산과 청렴한 의정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전원과 사무처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청렴아카데미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협의를 거쳐 선정된 청렴리더십특강, 청렴토크콘서트, 청렴서약식 등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청렴서약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직위를 이용한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금지,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적이익추구금지 등을 골자로 청렴서약문에 전의원이 서명해 대내외적으로 청렴 실천의지를 일리는 계기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청렴아카데미 운영을 비롯해 5월부터 비위의원 징계기준을 마련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의정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심의자료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또 시민과의 소통으로 정책 고민 소통시스템을 활용, 의회 주요 활동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정 모니터단 정책제안과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유형별로 본과 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밖에 시의회는 자체 홈페이지에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의회 위법부당한 활동에 대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세종 김공배 기자

2021년 04월 29일
08면 (지역)

忠南日報

2021년 04월 29일
08면 (지역)

세종시의회가 지방자치법 후속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 첫회의를 열어 상호 활동에 대한 논의였다.

지방자치준비 실무단 첫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역할과 과제 등 논의

세종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후속조치로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성장성장을 달리는 실무준비 단을 꾸려 본격 기동에 들어갔다.

세종시의회는 7월 의정실에서 김영중 시무처장과 의장담당관, 의사일법담당관, 전문위원 등 3팀 9개팀장이 참석해 지방자치법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준비단 첫회의를 했다.

또한 오는 7~8월까지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와 타 시도의회 품앗 등을 토대로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세부설천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공배 기자

(11.2x10.3cm)

▲ 2021.05.10_ 지역 08면 [충남일보]

▲ 2021.04.29_ 지역 08면 [충남일보]

금강일보

세종시의회 추경 심의자료 공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آل권리 보장”
의회 홈페이지 차리의안 메뉴서 확인

세종시의회는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추경예산에 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자료를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회와 이번 결정은 이전까지 본예산 일부의 제안 이유와 전체 규모만 제공해 예산안에 관한 시민들의 알 권리 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있었다. 이로써 이번에 공개되는 심의자료는 지방 재정 세제4조의2에 명시된 예산안 관련 첨부 서류인 세종시정·교육청, 사업소 등 추경 내용과 사업 개요 및 요구 내용, 산출기초와 편성 필요성 등이 포함된 세입·세출 예산에 사업별 설명서 등이다. 시의회는 관련 서류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전영진 기자 bc1201@gglibo.com

2021년 05월 13일
13면 (총합)

▲ 2021.05.13_ 지역 13면 [금강일보]

충청신문

2021년 06월 01일
03면 (총합)

의정모니터 활성화 간담회 세종시의회, 운영 방향 논의

세종시의회가 31일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2기 의정 모니터로 위촉된 단원 20명과 함께 그간의 활동 사항을 점검하고 의정 모니터 활성화 방안 등 향후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어 분과별로 헌법적인 의정 모니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논의했다.

의정 모니터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제안, 조례 등 차지법규에 대한 건의,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및 시민 불편 사항 건의 등 열린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과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해 입법과 제·추진과 상임위별 분과 구성을 도모 니터링 활동 범위를 세분화·다양화하는 한편 의정 모니터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하반기 의정 모니터 전체 회의를 비롯해 의회 상임위원회와 분과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니터단 활동에 대한 분기별 주간 실태 점검과 외부 심사 도입, 활동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규모 기자 lin1303103@dailycc.net

(5.4×18.7cm)

▲ 2021.06.01_ 종합 03면 [충청신문]

忠清日報

2021년 05월 26일
03면 (총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법 개정 축구 건의안’ 가결

‘국회 세종시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축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인천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4차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태원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4월 국회세종시야당 간접 법률 주요 과정과 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국회법 개정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화하기 위해 해당 시간을 꾀신 간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간의안에는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유지해 행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국회에 국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2021.05.28_ 종합 03면 [충청일보]



2021.5.26.(수) 인천광역시의회
국회 세종시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 축구 건의안을 통과했다.

한편 이태원 의장은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4차 임시회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사무실의 세종 이장을 꾀한 인건으로 상정해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을 이끌어냈다.

(17.3×10.6cm)

▲ 2021.06.03_ 지역 08면 [충남일보]

忠南日報

세종시의회, 행감 앞두고 주요 사업장 및 기관 방문

장애인복지관·시청자미디어센터·예술의전당서 의견 청취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 행정복지 위원회는 조직원에 위치장을 시작으로 7일까지 4일 간 2021년 행정사 감사일을 실시한다. 이날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세종 시 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 시청자미디어센터·세종문화의전당 현장을 다녀온 후 세종시 사회복지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순서로 진행됐다.

현장 방문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세종시 장애인복지관과 세종시 시청자미디어센터·세종문화의전당 현장을 다녀온 후 세종시 사회복지관과 세종문화예술회관을 순서로 진행됐다.

등에 필요한 장비와 공간 등을 물려왔다.

위원들은 개관 준비와 시설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미의 이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유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관련 서비스를 내용있게 살펴보았다.

이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설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미디어 활용 콘텐츠 제작과 지원, 체험

등을 꾹꾹히 살펴봤다.

세종예술예술회관은 신도심 내 첫 문화예술 전용공간으로 시민 기대가 큰 만큼 안전한 개관 준비와 시설을 이용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보울 것을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불편을 제거하는 시설물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 사항을 파악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사용 평소 불편하고 미비한 부분 등이 시민 눈높이에 맞게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민기 기자

(23.7×6.6cm)

▲ 2021.06.03_ 지역 08면 [충남일보]

2021년 06월 03일
08면 (총합)

충도일보

세종시의회 ‘현미경 감사’

보건소·기초생활 활동 진행

시민사회 모니터링 학술

39세 이내 세종시 저체중여성·

운영지원사업·감사위원회(행정복

세종시의회가 26일 자방의회와 경

질문과 함께 도내 4개

군·군수상장·군수상장과 함께

군수상장과 함께 경기도·

경기도·경기도·경기도·경기도·

2021년 3분기 세종시의회 회기 안내

08 Augus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eptember

1	2	3	4
5	6	7	8
12	13	14	15
19	20	21	22
26	27	28	29
			30

10 October

1	2
3	4
10	11
17	18
24	25
31	

■ 제70회 임시회(15일간)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추석 연휴 : 9. 20. ~ 22.

■ 제71회 임시회(9일간)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회의 날

E · V · E · N · T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오늘부터 1일

페이스북 ‘팔로우추가’ 혹은 유튜브 ‘구독’ 하시면 50분께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 권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 기간 :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

■ 방법 : 아래 두 가지 중 하나 선택

1 세종시의회
페이스북 접속

▶ 팔로우추가

▶ 인증샷
캡처

▶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인증샷
올리기

2 세종시의회
유튜브 접속

▶ 구독하기

▶ 인증샷
캡처

▶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인증샷
올리기

■ 선물 :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50분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 증정

■ 발표 : 7월 20일(화) 세종시의회 페이스북, 유튜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종의회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실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내내외

〈보내실 곳〉

우편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담당자 박천국)

전화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havnpark@korea.kr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방송 보려가기 counciltv.sejong.go.kr

세종의회소식
행정수도 세종, 시민중심 열린의회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